

# 미래농업인력의 육성정책 방향

- 일 시\_ 2016. 6. 27(월), 14:00 ~
- 장 소\_ 전북연구원 세미나실
- 주 최\_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 주 관\_ 전북연구원





삼락농정 포럼 '미래농업인력 육성'  
2차 전문가 워크숍

---

## 미래농업인력의 육성정책 방향

---

- 일 시 : 2016년 6월 27일(월), 14시
- 장 소 : 전북연구원 세미나실
- 주 최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 주 관 : 전북연구원

**삼락농정 포럼 '미래농업인력 육성'  
2차 전문가 워크숍**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6년 6.27(월), 14:00~17:00
- 장 소 : 전북연구원 세미나실
- 주 최 :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 주 관 : 전북연구원
- 주 제 : 미래농업인력의 육성정책 방향
  - 발표 1 : 광역단위 신규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 발표 2 :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 방향

● **진행순서**

(사회 :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3:30~14:00	'30	접수 및 등록	
14:00~14:10	'10	인사말 :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	
14:10~14:40	'30	발표 1. 광역단위 신규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4:40~15:10	'30	발표 2.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 방향 김중기 전북대학교 교수	
15:10~15:20	'10	휴식 및 교류	
15:20~17:00	'100	<b>종합토론</b> (가나다 순) · 좌장 : 소순열 전북대학교 교수 · 김사균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팀장 · 김성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장 · 김정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서병준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 신용광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과 교수 ·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

## 목 차

---

주제 발표문 1

4

광역단위 신규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마상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제 발표문 2

21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 방향

김중기 / 전북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문

53

## 광역단위 신규 취농과 창농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1. 전북 농업인력 실태와 문제점
2. 전북의 농업인력 육성 관련 가용 자원
3. 도 차원의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관련 자원 연계

마 상 진 / msj@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광역단위 신규 취농과 창농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마 상 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1. 전북 농업인력 실태와 문제점

### □ 농업인력 실태

- 전북지역의 가구수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 2005년 714개(전국 과소화 마을의 14.1%), 2010년 1,027개(20.1%)

[표 1-1] 전국 과소화 마을 수 변화

(단위: 개, %)

구분	2005년	2010년
광역시	15 ( 1.6)	60 ( 6.0)
경기도	82 ( 2.1)	148 ( 3.7)
강원도	87 ( 4.0)	114 ( 5.2)
충청북도	164 ( 5.8)	258 ( 8.9)
충청남도	106 ( 2.4)	158 ( 3.5)
전라북도	714 (14.1)	1,027 (20.1)
전라남도	505 ( 7.7)	780 (11.7)
경상북도	161 ( 3.1)	223 ( 4.3)
경상남도	212 ( 4.4)	322 ( 6.8)
제주특별자치도	2 ( 1.2)	1 ( 0.6)
전체	2,048 ( 5.7)	3,091(8.5)

주: ( )안은 시도별 마을 수 대비 과소화 마을 수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성주인 등(2012)에서 재인용

- 과소화 마을일수록 농가 비율이 높으며 농업 중심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
  - 과소화 마을 중 농가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약 57%(80% 이상인 곳은 19.5%이며, 60~80%인 곳은 37.5%)를 차지
  - 반면, 대규모 마을의 80.7%가 농가 비율 20% 미만이며, 또한 농가 비율이 60% 이상인 마을은 1%에 불과
  - 요컨대 농어촌의 배후 지역은 농업이 중심이고 상당수 마을에서 과소화가 진행되는 반면, 소재지 주변 지역은 비농가가 많고 혼주화가 진행되는 등 동일 읍면 내에서도 마을 유형 간의 차이가 큰 상황
- 지난 10년간 전북의 농가는 매년 2천호, 농가인구는 9천명 정도가 감소
  - 농가: 지난 10년간 21,389호의 농가가 감소하여 감소율은 -17.6%로 전남(-24.5%) 다음으로 감소율이 높음
  - 농가인구: 지난 10년간 91,573명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역시 전남(-33.2%) 다음으로 높음(-28.7%)

[표 1-2] 지난 10년간 농가, 농가인구 변화

(단위: 명, 호)

지역	농가			농가인구		
	2005	2010	2015	2005	2010	2015
전국	1,272,908	1,177,318	1,088,542	3,433,573	3,062,956	2,569,449
서울	3,496	4,123	3,912	11,770	13,602	11,557
부산	8,712	8,457	8,069	27,142	24,961	20,949
대구	16,292	16,974	16,572	50,343	50,351	44,545
인천	14,569	13,835	13,082	41,221	37,750	32,456
광주	14,050	13,079	12,037	41,771	37,994	30,748
대전	8,657	8,914	9,425	28,095	27,605	25,561
울산	11,980	12,124	12,384	34,597	34,078	31,222
경기	141,503	135,332	126,682	456,515	412,138	350,204
강원	75,790	72,472	73,085	214,434	191,922	175,576
충북	85,723	79,963	74,609	238,610	211,522	178,246
충남 (세종)	163,197	151,424	138,582	446,022	394,324	324,802
전북	121,749	109,433	100,360	318,998	277,611	227,425

전남	198,764	170,213	150,155	477,611	395,835	318,891
경북	216,128	201,651	184,640	543,237	491,225	410,127
경남	156,080	141,431	131,457	392,926	347,499	293,724
제주	36,218	37,893	33,491	110,281	114,539	93,416

- 그나마 2010년대 들어 귀농자가 연간 2천명 수준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이들 상당수가 3040세대(농가 및 농가인구는 전국 대비 9% 수준이지만, 귀농가구, 가구원은 11% 수준)
- 하지만 이들 숫자로는 줄어드는 농업인구의 감소를 막기에는 역 부족

[표 1-3] 전북지역 귀농가구원

(단위: 명)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258	1,944	2,257	2,177	2,143
30대 이하	561	703	767	748	690
40대	267	443	480	416	399
50대	251	473	603	623	628
60대	130	242	283	304	306
70대이상	49	83	124	86	120
30~40대 비중	65.8%	59.0%	55.3%	53.5%	50.8%

## □ 문제점

- 농업인력, 특히 청년층 부족 문제가 심각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부재
- 농업계 내부의 이해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한 거버넌스 부재
- 농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의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활용 그리고 이들과 농산업계간의 연계 활동 부족

## 2. 전북의 농업인력 육성 관련 가용 자원

### □ 농업계 학교 (농고, 농대)

- 농업계 고등학교 9개에 재학생 3천여명(2015년 졸업생 1,293명) 교사자원 109명
- 한국농수산대학을 포함하여 3개 농업계 대학에 재학생 3천여명 (2015년 졸업생 851명, 교수자원 134명)

[표 1-4] 전북지역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

(단위: 명)

학교	학교특성	농업관련과	졸업생	농업교사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순수농업고	생명지원과	898	34
		환경산업과		
		식품과학과		
김제자연고등학교	순수농업고	식물지원과	125	26
		동물지원과		
		농산업기계과		
		식품가공과		
정읍제일고등학교	실업고(농, 공)	산업기계과	87	13
		환경조경과		
		바이오식품산업과		
부안제일고등학교	실업고(농, 공)	산업기계과	47	9
		푸드테크과		
남원용성고등학교	실업고(농, 공)	농업토목과정	43	6
		조경산업과정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순수농업고	말산업과	21	8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순수농업고	치즈과학과	26	5
		조리과학과		
한국한방고등학교	실업고(농, 가사)	한방지원과	25	4
영선고등학교	종합고(농, 공, 일반)	관상원예과	21	4
합 계			1293	109

[표 1-5] 전북지역 농업계 대학 현황

(단위: 명)

대학	학과	졸업생	(전임)교수
한국농수산대학	과수학과	41	33
	대가축학과	42	
	수산양식학과	25	
	식량작물학과	45	
	중소기축학과	41	
	채소학과	43	
	특용작물학과	57	
	화훼학과	47	
원광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원예학전공	30	26
	애완동식물학전공	41	
	생물환경화학과의	31	
	환경조경학과	57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물학과	38	75
	농업경제학과	40	
	동물생명공학과	19	
	동물자연과학과	19	
	동물자연과학과(구)	6	
	목재응용과학과	17	
	산림환경과학과	32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7	
	생물환경화학과의	24	
	식품공학과	35	
	원예학과	39	
	작물생명과학과	35	
	지역건설공학과	20	
합	851	134	

□ 농업관련기관

○ 농촌진흥기관

- 도 기술원과 14개 농업기술센터
- 지도요원: 464명(도원 26, 시군센터 438)
- 연구요원: 70~80여명? (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구직 규모 760여명 규모의 1/10 정도)
- R&D시설
  - 약용자원연구소(1994~): 오미자, 인삼, 천마, 꾸지뽕나무, 지황, 하수오, 일당귀, 일천궁, 가시영정귀
  - 허브시험장(1992~): 허브식물, 로즈마리, 씨감자, 곤달비, 아스파라거스, 삼채
  - 과채류연구소(2010~): 파프리카, 파프리카 유전자원
  - 수박시험장(1995~): 수박, 수박 유전자원
  - 종자사업소(1967~)
-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1970~)
  - 농식품가공교육관, 실용농업교육센터(JATC)
  - 20명의 요원
- 현장실습교육장(WPL) 10곳
  - 영광포도원(포도), 한민농장(한우), 흥로원(사과), (주)행복한농장(양돈), 신건승농장(시설채소), 남원모던(파프리카), 친지원(시설채소), 온생명영농조합법인(전통장류), 산수영농조합법인(양돈), 솔솔포도원(포도)
- 농업관련 각종 중간지원조직
  - 귀농귀촌 지원센터 / 농촌유학 지원센터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 전라북도 6차 산업지원센터
  - 전북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협
  - 중앙회: 지역본부 1, 농정지원단 13개

- 지역농협/축협 93개: 농협 76, 축협 10, 품목농협: 7 (조합원 23만 명)
- 농협 직원(지역 농/축협 62,553명, 지역본부 및 지원단 998명의 1/10 규모): 6300여명

○ 기타 공공기관

- 농어촌 공사 전북지역본부, 새만금사업단, 농어촌 공사 지사: 전주·완주·임실, 고창, 정읍, 무진장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북지사
- 정읍동농산물도매시장
- 전북연구원

□ 농업인과 농산업체

○ 선도농업인

-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 강소농
- 후계농업경영인, 쌀전업농...

○ 농민단체

- 농어업회의소: 진안, 고창 + 완주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전국새농민회, 쌀전업농회, 유기농연합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화훼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농어촌체험마을협회, 6차산업협회, 귀농인협의회...
-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협의회, 농가주부모임...

○ 농업법인

- 전북 농업법인수(통계청 2014)는 1,939개(전국 15,043개의 12.8%)에 12,077명(전국 102,296명의 11.8%)이 종사
- 농식품법인연합회 소속 주요 법인들

[표 1-6] 전북지역 주요 농업법인들

회사명	주요품목	지역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수산물,추어탕,미꾸리엑기스	남원
우리들 영농조합법인	머스크메론,완숙토마토	순창
농업회사법인 B멜론(주)	멜론	남원
농업회사법인주해성	양상추,토마토,파프리카	김제
(유)동건홀딩스	육가공품	전주
한미식품(주)	반찬류(김치,절임류,조림류,젓갈)	익산
주식회사고창항토배기유통	농수축산물	고창
농업회사법인 국순당고창명주(주)	복분자주	고창
함씨네토종콩	콩가공품	전주
영농조합법인 참농	양곡	정읍
영농조합법인 애농	어린씩(잎) 채소(샐러드전용채소)	진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농산	파프리카	김제
(주)로즈피아	장미,백합	임실
(영)완주봉상생강조합	봉동생강및가공품,봉동건조시래기,봉동수세미	완주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	수박,야채	부안
덕유양조	머루와인,산머루주	무주
유한회사(주)지우	파프리카	익산
청우양봉원	벌꿀 및 프로폴리스, 봉산물	완주
지성영농조합법인	쌀	완주
흥로원영농조합법인	사과	장수
온생명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산물, 교육상품 (전통장류,장아찌,산야초효소,쌈채류,교육)	진안
(주)삼보죽염	삼보죽염	고창
농업회사법인(주)전북(행복하누)	섬유질사료	정읍
영농조합법인 천지원	유기농채소	김제

○ 전후방 농산업체

- 후방산업(농기계, 농자재, 종자, 농약, 비료)

[표 1-7] 전북지역 농기계회사

사업체명	주요생산물
신성기계공업사	석발기, 왕겨풍구, 연마기 등
형기농기사	왕겨풍구
광선농기구사	곡물이송기, 자동계량기,콘베이어...
(주)기원전자	부품 (레귤레이터,경음기), 자동...
(유)웅진기계	로타베이터, 플라우, 무논정지기...
(주)세웅	로타베이터, 플라우,고소작업차
동인공업(주)	농용로우더
한성	농산물건조기, 농산물세척기
익산농기계	쟁기, 퇴비살포기, 비료살포기, ...
금전기업(주)	모터펌프, 수문권양기, 수문문비...
(유)영신	플라우
(유)신일	수문권양기, 수문문비, 수문문틀...
세형아마존	로타베이터
(주)라이브맥	베일러, 사료배합기, 반전집조기...
발산공업	콩탈곡기,콩정선기,콩선별기,상토...
대원정공(주)	로타베이터, 플라우, 버킷, 휴립...
위켄글로벌(주)	로타베이터
(주)이천종합농기계	재배관리(자동릴분무기, 펠비닐수...
(유)광원농기계	중지밭아기, 육묘상자세척기
(주)아폴로	총전식 저압 방제기, 배부식 인력...
삼성농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곡물적...
(유)한누리	농용환풍기, 자동급수기, 안개분...
(유)대도	사료생산시설, 사료배합기
(유)호남산업	곡물자동계량기, 톨백저울, 건조...
(유)대성이엔지	사료배합기
(주)범농	육묘상자
(유)장수케이에스엠	축산(그래플, 지게발, 로더)
(유)한성산기	펌프, 전동기
정주농축산기계	사료급이기 등
해전산업(주)	수문, 권양기
(주)현대직파기	이양기 및 경운기용 직파기
바우컴퍼니(주)	농용로더
보농(주)	자동목걸이, 급이기, 톨백걸이
재인텍	사료작물적재함, 축산기자재
명일기공	트.로타베이터
동한테크(주)	곡물건조기용집진기, 곡물자동계...
시즈오카한성(주)	곡물건조기
(주)케이에스에프	트랙터용 마늘파종기
대륜산업(주)	농용환풍기
현대농기계	땅속작물수확기, 농기계보관선반

(주)호암엔지니어링	농산물저온저장고
(유)태영이앤지	육묘상자이송기
LVM머신테크	폐사처리기
(주)티에스팜	유리온실용 자재
(주)도부	트랙터용 퇴비살포기
(유)성원산업	무인자동방제기
(주)씨앤씨테크	SS용 캐빈
(주)대광정밀	논두렁조성기, 씨레
금강농기계	곡물적재함

- 농업·농촌 컨설팅 업체

[표 1-8] 표 8. 전북 농업 컨설팅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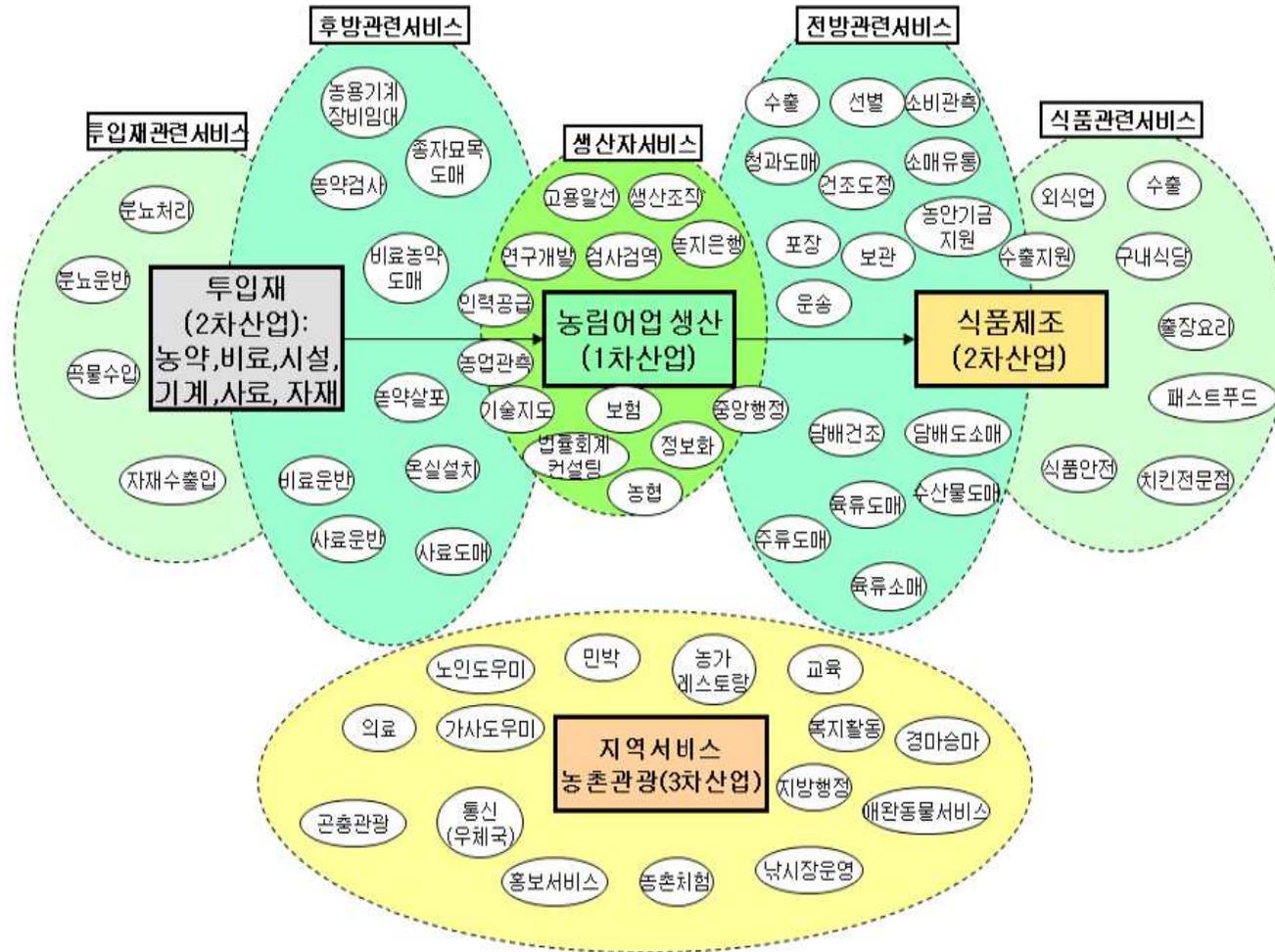
업체명	컨설팅 분야
지역농업연구원	1)경영개선 2)마케팅 및 홍보 3)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4)6차 산업화 5)지역개발
에스케이아그로	1)경영개선 2)브랜드개발, 마케팅 및 홍보 3)정보화지원 4)6차산업 5)로컬푸드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1)경영개선 2)마케팅 및 홍보 3)시설설비 및 운영관리 4)6차 산업화 5)로컬푸드 6)기술개발
씨브스트라투스코리아(주)	1)경영개선 2)기술개발
오르빌	1)경영개선 2)6차 산업화 3)기술개발

- 식품 가공, 식품유통, 외식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 기타 연관된 자원은?

- 사회적 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및 시민사회 단체...

[그림 1-1] 농업과 전후방 관련 산업



### 3. 도차원의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및 관련 자원 연계

#### □ 도차원의 농업인력육성목표의 설정

-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지역적(159개 읍면, 5140개 리) 측면의 육성 목표 설정
  - 품목별 접근 → 지역적 접근
- 심각한 과소화, 고령화에 대응하여 5140여개 마을 당 1명의 신규 젊은 인력 (40세 미만) 배치
- 매년 500명씩 10년간 육성 계획 수립
  - 농고 졸업생 1200명 중 10% 120명
  - 농대 졸업생 500명(농수산대 300명 제외) 중 10% 50명
  - 귀농자 600명 중 300명
  - 기타 30명
  - 젊은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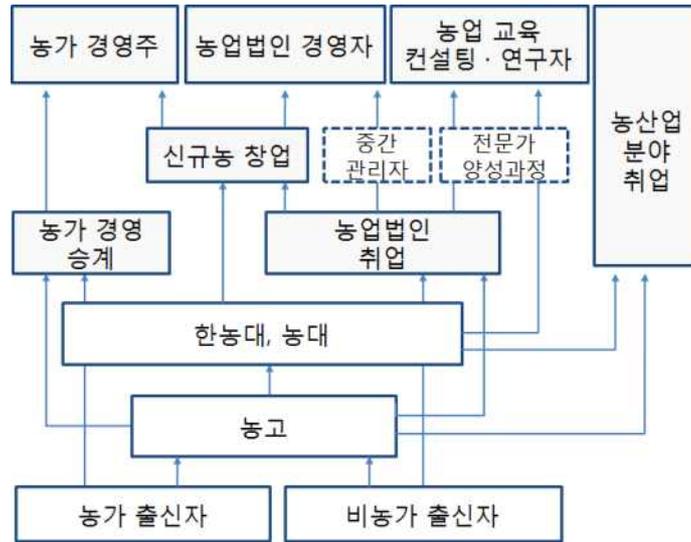
#### □ 전북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 전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인력육성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의 능동적 연계
- 전북도의 관련 자원
  - 농업계 학교(9개), 농업계 대학(3개),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지역 농협(93개), 농업법인(1939여개), 농민단체, 지역소재 R&D 연구소,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선도후계농, 농산업계: 민간 주체들(컨설턴트, 활동가....)+ 후방(비료, 농약, 사료, 종자, 농기계) + 농축림산가공 + 식품유통 + 외식 + ...
  - 농업관련 각종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14개 기초지자체의 능동적 참여 구조가 중요
-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한 도단위 중간지원조직 확대 개편
  - 광역 지자체 + 농촌진흥기관 + 기초지자체
  - 민간 주도 + 공무원 지원 → 농업 교육 및 자원 연계 + 귀농자/후계자 정착 지원 + 농고·농대생 취·창업지원
- 도 차원의 농어업회의소 설치 고려 (충남, 제주 사례)

□ 우수 인적자원 농업계열 유치 및 단계적 안착 지원

- 농업계 학교 또는 귀농·귀촌 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유형에 따라 어떠한 경로를 밟아 농업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현직자 및 내용 전문가 대상 조사 또는 성공경력자의 경력경로 추적 등의 조사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수 학생 조기 유치 및 진로 경로 제시
  - 면당 1명씩 군당 10명, 도단위 100여명 집중 육성
  - 농고→ 농대로 이어지는 농업인재 육성 시스템 가동
  -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생활비 + 교납금’ (전액) 지원
  - 초중학교에 도시농업(학교텃밭)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기회, 영농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
  -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는 학생들이 농업분야에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성장경로를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장해주어야 함. 한 예로 영농기반이 있는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 →) 농대 → 농가 경영 승계 → 농가 경영주’ 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비농가 출신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 )농대 → 농업법인 취업 → 창업 또는 중간관리자 → 농가 경영주 또는 법인 경영자’ 또는 ‘(농고 →) 농대 → (법인 취업 →) 전문가 양성과정 → 농업 교육·연구자(전문 교수요원·컨설턴트)’ 로 성장하여 부모의 영농기반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 및 농산업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경로가 제시되어야 함.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농업계 학교 및 농업인력육성 기관들의 관련 프로그램과 자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인가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 조직·운영되도록 해야 함.

[그림 1-2] 농업계 학교를 통한 단계적 농업인력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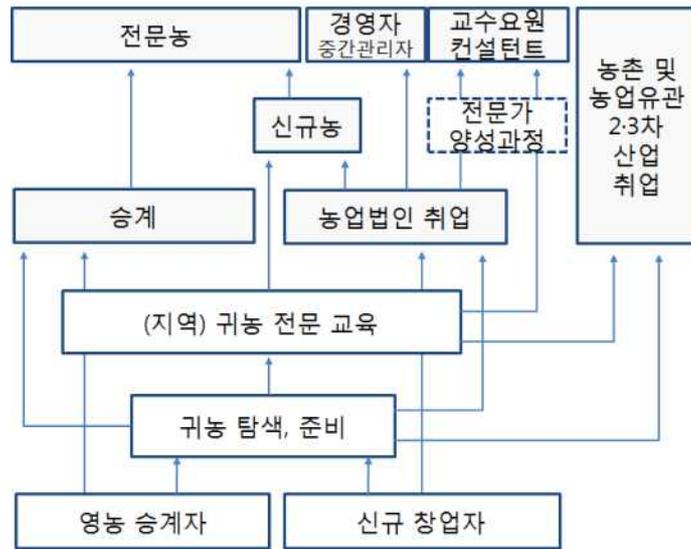


- 젊은 귀농·귀촌인력을 신규 농업인력으로 유치
  - 귀농·귀촌인의 경우 영농 승계 여부에 따라 귀농 탐색,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미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성장경로를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강해주어야 함. 한 예로 영농기반이 있는 승계자의 경우 ‘(귀농 탐색, 준비 교육 →) (지역) 귀농 전문교육 → 농가 경영 승계 → 농가 경영주’ 로 이어질 수 있게 하고, 비농가 출신 신규 창업자는 ‘(귀농 탐색, 준비 교육 →) (지역) 귀농 전문교육 → 농업법인 취업 → 창업 또는 중간관리자 → 농가 경영주 또는 법인 경영자’ 또는 ‘(귀농 탐색, 준비 교육 →) (지역) 귀농 전문교육 → 농촌 및 농업유관 2·3차 산업 취업’ 을 통해 농업 및 농산업, 농촌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귀농·귀촌 정착과정에 겪는 각종 자금, 기술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기초 지자체 단위의 단계적 상담 및 교육을 통해서 해결
  - 기존 농업인들이 농업기술 습득을 위해 주로 참여하는 농업인대학 프로그램 적극 활용. 귀농·귀촌인만을 위한 예비 과정을 신설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후 농업인대학 본 과정에 들어가도록 유도

〈 전북 고창 사례〉

○ 귀농귀촌 기초 정보수집 및 상담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고창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 귀농귀촌학교 (지역 입문: 교육시간 126시간) → 농촌개발대학 (지역 적응: 기존 토착민과 함께 교육 이수 100시간)

[그림 1-3] 귀농인 교육을 통한 단계적 농업인력육성



□ 도 자체 농업 취·창업 지원(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 우수 농업법인 (100여개 정도) 선정하여 농고/농대생 취업시 인건비 지원 + 법인 위탁교육 실시
  - 경영 규모가 우수한 농업법인을 선정하여, 신규 취농인(학생, 귀농인)이 일정기간 (2년 정도) 취업을 하여, 농업기술 뿐 아니라 농촌 생활에 필요한 각종 네트워크와 역량을 개발하도록 함.
- 농업계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집중 연계
  - 필요시 학교에서 직접 학교 농업법인 육성
  - 3~5명 단위 집단 창업 + 지역농협 +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연계를 통한 패키지 창업 지원
- 6차 산업 펀드를 활용하여 도 자체의 취·창업지원자금 마련 + 전북도 진출 기업체의 농업투자 및 진출 유도
- 재직자특별전형 (선취업후진학) 확대
  -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명자원융합학과
  - 3년 이상 영농 종사자

### 진천군 '센트럴 생겨진천 투자조합'

#### ○ 펀드 조성

- 2014년 캐피탈 회사(CL인베스트→ 센트럴투자파트너십)의 제안에 따라 진천군 농업지원과에서 펀딩 진행
- 캐피탈 회사 10억 + KU 5억 + 지자체 15억 + 모태펀드 70억 ⇒ 센트럴생거진천투자조합(5년에 걸쳐 조성 2014년 20억 조성) 결성

#### ○ 투자

-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투자회사에 의해 투자 심사를 통해 최종 2개사(참채원, 후드원)에 15억 투자
- C 농업회사법인: 친환경 채소 유통. 진천의 친환경 영농조합 참여, 향후 체험활동까지 연계
- H 사(외지에서 신규로 유입): 관내 농산물 가공 이후 유통. 지역의 농업계 특수목적고인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와 인재육성·취업을 위한 산학협력

### 청년창업 펀드

- 1세대 선배 벤처 및 대기업이 출자하여 청년창업자에 투자하는 펀드. 중소기업청이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10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 절반 이상이 29세 이하인 창업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 정부와 창업투자회사 외에 카카오와 스마일게이트 등 청년창업에 성공한 선배기업들이 210억 원을 출자해 5개 펀드를 조성. 지금까지 4개 창업기업에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2개 기업에 대한 투자검토를 마친 상태. 2017년까지 총 200개 기업에 투자할 계획
- 펀드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며 제품 사업화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

### □ 우수 농업 교사·교수 자원 육성

- 산업계 인재를 농업 학교 현장으로 체계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 농업학교 교사/교수를 산업계와 연계시키는 노력
- 품목별, 전공 분야별 선도농, 교사, 교수, 농업기술센터(기술원) 등 전문가의 학습조직 활성화 지원

##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

1. 문제의식
2. 전라북도 청년농업인의 실태 및 미래농업인력 출현조건
3. 정책동향
4. 새로운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

김 중 기 / kjg7824@daum.net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과 조교수

##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

김 중 기 /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융합학화 조교수

### 1. 문제의식

#### 1) 배경

-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와 후계자 부족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한지 실로 오랜 세월이 지남.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인력육성 정책을 실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오히려 우리나라 농업인력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감소하거나 저하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수는 급감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농업인력구조 변화에서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표2-1>과 같이 농가수가 1990년에서 2014년까지 24년간 연평균 2.4%씩의 감소를 보여,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농가인구의 감소폭도 연평균 4.2%로 전국의 3.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전남의 경우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 감소추세가 전국의 변화폭과 같거나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전국 대비 전북의 농가수 및 농가인구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표2-2>는 경영주의 연령구조별 농가구수의 변화 추이임. 20세 미만 경영주는 1990년에 48호가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연령의 경영주도 1990년 3,280호 있었지만 2014년에는 115호에 불과함. 30대 연령층도 1990년 20,563호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급감하여 2014년에 956호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40~50대 연령층은 변화폭은 다르나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임
- 한편 60대 연령층의 경영주는 그 절대수는 감소추세이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24.7%에서 2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경영주는 급증하여 2014년 현재 41,870호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 농가수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 호, 명,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연평균 증감률	
농가수	전국(A)	1,767,033	1,500,745	1,383,468	1,272,908	1,177,318	1,120,776	-1.9
	전북(B)	188,160	152,257	137,417	121,749	109,433	104,036	-2.4
	전남(C)	298,017	251,914	232,634	198,764	170,213	160,142	-1.9
농가인구	전국(D)	6,661,322	4,851,080	4,031,065	3,433,573	3,062,956	2,751,792	-3.6
	전북(E)	708,079	485,276	388,907	318,998	277,611	250,581	-4.2
	전남(F)	1,080,170	748,436	606,419	477,611	395,835	355,601	-3.1
B/A *전북	10.6	10.1	9.9	9.6	9.3	9.3		
C/A *전남	16.9	16.8	16.8	15.6	14.5	14.3		
E/D *전북	10.6	10.0	9.6	9.3	9.1	9.1		
F/D *전남	16.2	15.4	15.0	13.9	12.9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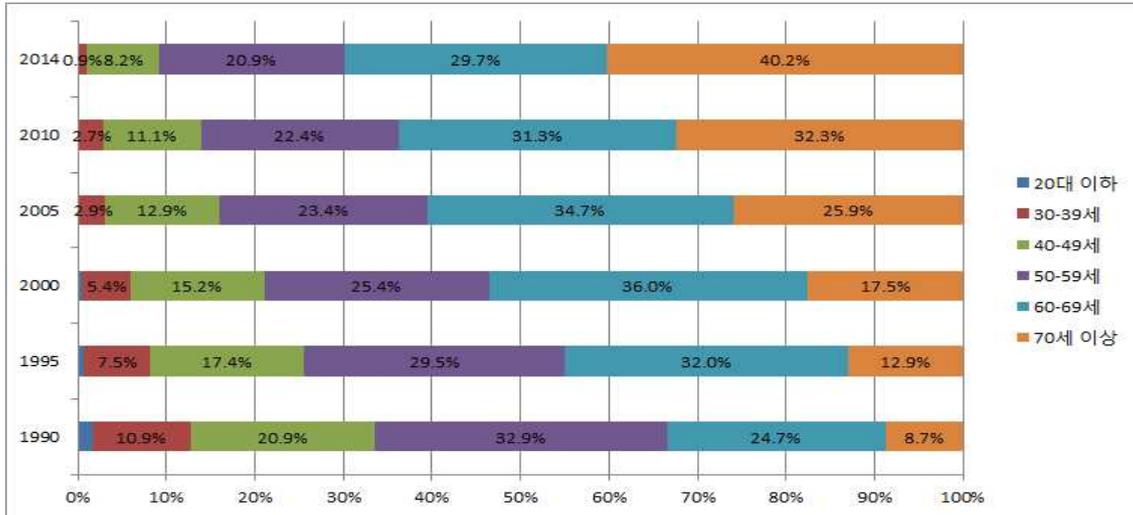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표 2-2] 농업경영주 연령구조별 농가구수 변화 추이

구분	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990	188,160	48	3,280	20,563	39,308	61,989	46,522	16,450
1995	152,257	8	950	11,487	26,471	44,919	48,747	19,675
2000	137,417	1	665	7,398	20,851	34,927	49,496	24,079
2005	121,749	0	242	3,543	15,750	28,487	42,188	31,539
2010	109,433	0	197	2,923	12,131	24,494	34,296	35,392
2014	104,037	0	115	956	8,487	21,750	30,859	41,87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그림 2-1] 농업경영주 연령별 분포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농림어업조사

- 이와 같이 전라북도의 농업인력 구조는 경쟁력이 취약한 고령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이것이 전라북도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활성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우려됨

## 2) 지방차원의 대책 필요

- 어떤 산업이든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며, 사람이 없으면 그 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을 것임. 특히, 농업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전북농업의 확립을 지향한다면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람들이 농업자체를 생업으로 선택하여 영농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만이 상존한다면 인력확보 자체가 지극히 어려워질 것임. 현실적으로도 전북농업의 산업기반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으며 농업·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활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농업인력 확보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새로운 농업인력을 확보·육성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농촌에서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악한 생활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전라북도는 특히 삼락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 “의 실현과정에서 새로운 농업인력의 위상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함

- 전라북도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정부는 전라북도 청년농업인의 감소에 따른 지역농업의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생각됨. 지방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효과적인 농업인력 확보정책이 거의 없음
- 그렇다면 지방·지역 차원에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인력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 지역에서의 농업인력은 농촌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며 앞으로 그 확보 여부가 지역의 사활에 걸려 있는 문제임. 최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전국의 80개 시군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시사하는 바가 큼<sup>1)</sup>
- 어쨌든 청년농업인의 확보·육성은 도와 시·군, 농업유관기관, 농협 등 지역 전체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임

### 3) 미래농업인력에 대한 정의와 본 발표의 목표

- 금번 보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수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함
- 그러나, 일반적으로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후계자라고 하면 농업·가업·지역 중 무엇을 이어나가기를 의도하고 있는지 불명확하며, 그 표현에 사용되는 용어도 다양하고, 연령의 범위가 불명확함
-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층이 취약한 전북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담당할 청년층 인재를 전북의 「미래농업인력」**이라 정의하고, 요건으로는 ①전라북도 내에서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하고자 결정했거나 ②취농하여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정착지원이 요구되는 자와 ③잠재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함. 또한 ④그 연령 범위는 취농하여 20년 이상 영농이 가능한 39세로 상한을 설정하고, 하한은 15세 정도로 설정하며,

---

1) 일본 이와테현 전 지사 마스다 히로야가 출간한 책 『지방소멸』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나 20~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한국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국민일보가 2016.3.17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하였음.

- ⑤농업취업형태와 관련해서는 자가농업경영 계승자를 포함하여 신규 창업, 법인 등에 취업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년으로 한정함. 단, 경영권의 유무 및 성별은 무관한 것으로 함
- 이와 같이 「미래농업인력」을 폭넓게 정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농업후계자 육성 정책 등이 이미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청년이나 귀농인 등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농촌의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초·중·고 학생 등이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에 관련된 시책 등은 미약했다는 판단 때문임
- 또한, 이미 취농한 청년농업인을 「미래농업인력」의 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취농인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정책전개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육성과정에서 청년들 간 기술교류,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진다면 정착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미래농업인력의 출현 조건을 명확히 하여 그 조건 정비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농업인의 확보대책이 단순히 농업·농촌의 유지 수단이나 인간성을 중시한 청년의 주체적인 취농 조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보다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새로운 시책 도입 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본 발표의 목표로 함

## 2. 전라북도 청년농업인의 실태 및 미래농업인력 출현조건

-청년농업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 1) 설문조사 개요

- 신규 취농인 및 청년농업인 등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39세 이하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06명에게 설문 응답을 요청하였으

나 38명만이 응답하여 모집단인 ‘전라북도 청년농업인’의 특성이나 실태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차후 보완하기로 하고 본 발표에서는 주요 설문항목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만을 활용하여 추정과 유추를 가미하여 분석하기로 함

## 2) 설문결과 분석의 시점

- 사람이 태어나서 취농하기까지 성장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구분별 청년농업인 출현 조건을 고찰하여 본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의 시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가정에서는 ‘경영기반의 확립’ 여부가 원활한 영농계승을 좌우할 것임. 농업이 직업으로서 성립하는 최저조건 중 하나는 물질적 보수에 의해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함. 이와 함께 노동의 재생산 및 생활의 충실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확보가 필요함
- 또한 가정에서 청년농업인이 용이하게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은 ‘경영책임의 조기부여’임. 이를 통해 경영계승이 원활해질 수 있고 청년의 혁신성과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조기에 이양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에서는 ‘지역농업의 활력’ 여부가 중요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시장교섭력이 강한 농산물과 그 생산주체들의 연대감·협조성에 의한 조직화 정도가 청년농업인 출현 조건으로 작용할 것임. 그 조직들이 청년의 발상과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함
- 그리고 지역의 ‘농촌생활의 기반·시설정비’ 정도가 청년농업인의 출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토지기반 및 농업생산의 공용시설·기계의 정비, 생활·문화·위락시설의 정비가 잘되어 있어야 할 것임. 청년들의 삶의 질 지향 측면에서 필요함
- 또한, 지역에서 ‘주변의 청년농업인들의 존재나 이끌어줄 수 있는 지인의 존재’ 여부가 청년농업인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것임. 지역사회에 우수한 선배 청년농업인 및 동년배 청년농업인이 존재해야 하는 것. 고립감이 불식되어야 생활의욕이 고양될 수 있음. 그러한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상호 연찬 격려의 장이 될 수 있어야 주체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에 대한 지도·지원체제의 정비’가 필요함. 지역농업리더가 존재하여 취농지향청년에 대한 농업지도가 행해지거나 장학자금 및 영농개시자금

제도가 정비되는 것임

- 한편, 학교에서는 ‘초중학생에 대한 농업교육’ 이 청년농업인 출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됨. 농업의 체험교육 등이 행해지는 것. 이는 직업 선택의 계기를 부여할 수 있고, 자주적 판단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부여할 수 있음. 그래서 그 중에 농업을 지향하는 청소년 출현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라 생각됨
- 그리고 ‘우수한 농업교육기관’ 이 존재를 지역에 기반한 농업교육이 청년들에게 실천적 지식과 기술을 부여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조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을 때 청년농업인의 출현이 용이할 것이며,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직업적 가치관, 경영감각, 경영관리능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응 능력으로 이어져 주체적으로 취농하는 청년의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됨
- 이와 같은 조건들이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다 파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후 보완과정에서 이러한 시점을 찾아내고자 함

### 3) 응답자의 속성

- 연령·성별·가족형태의 특징
  - <표2-3>을 보면 응답자의 연령은 총 38명 중 20대가 14명, 30대가 24명이며, 그 중 남성 29명이며 여성은 9명이며, 응답자 중 반이 안 되는 17명이 결혼을 하였으며 그 중 12명은 배우자와 함께 영농을 하고 있으며, 5명의 배우자는 농업 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형태는 미혼자가 많아 본인+기타가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혼자의 경우 단독세대는 없으며, 부부만의 가족형태도 6명으로 적은 편으로 2세대 가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표 2-3] 응답자의 속성(연령·성별·가족형태)

연령(n=38)		성별		결혼 여부 및 배우자 영농참여 상황		가족형태	
20~29세	14	남성	29	결혼	17	본인 부부	0
				배우자 영농 참여	17(부부 함께 영농12, 다른 직업 종사 5)		본인+기타 부부+자녀
30~39세	24	여성	9	미혼	21	부부+자녀+기타 부부+기타	7 3
							1

- 영농경력·부모영농 여부·출신지역·최종학력·영농 전 직업 등의 특징
  - <표2-4>를 보면 영농경력은 2년 미만이 14명이며 24명은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 38명 중 29명의 부모가 영농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응답자도 9명 있음. 도내 출신자가 대부분이며 대도시 출신도 3명 존재함. 30명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계 학교 출신자가 12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영농 전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 종사 경력이 있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함
  - 표에는 없지만, 영농 전 사회경험이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전문기술이나 경영·마케팅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2-4] 응답자 속성(영농경력·최종학력·영농 전 직업 등)

영농경력		부모 영농 여부		출신지역		최종학력		영농 전 직업	
없음	5	종사하지 않음	9	도내	35	고졸(농업계) 전문대졸(농업계) 4년제대학(농대) 대학원이상	8(2) 12(6) 17(4) 1	관리자	2
1~2년	9							전문분야	3
3~4년	10							사무직	8
5~7년	11							서비스직	3
10년이상	3	영농종사	29	서울	3			판매	3
								농업종사	2
								기능원	3
								기타	14

- 응답자의 속성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경영기반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원활한 신규취농을 좌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농가자녀의 경영계승을 촉진하는 시책이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 그리고 도내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보면 정책전개에 있어서 도내 출신 자녀들의 유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농업계 학교 출신이 38명 중 12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농업계 학교 출신들의 취농 촉진에 대한 정책 전개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임

#### 4) 영농경위 및 특성

- 영농동기
  - 청년농업인의 영농(취농) 동기를 보면 <표2-5>에서 보듯이 「부모의 영농승계」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보였으며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해서」와 「미래의 농업전망이 좋아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영농동기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20대의 경우는 「부모의 영농승계」가 두드러짐

[표 2-5] 영농동기(복수 응답)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n=14)	30대(n=24)
미래의 농업전망이 좋아서	10	3	7
부모의 영농승계를 위해서	16	11	5
자율적인 삶을 위해서	9	3	6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4	1	3
농업이 적성에 맞아서	4	1	3
추구하는 가치실현을 위해서	12	4	8
기타	2	1	1

○ 취농형태

- 취농형태는 「부모님 등의 영농 승계」가 가장 많은 20명이며, 「신규 창업」이 14명이고 「법인 등에 취업」의 형태가 2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대의 경우는 앞에서 취농동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 등의 영농승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는 20대와는 달리 「신규 창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2-6] 취농형태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	30대
부모님 등의 영농 승계	20	10	10
신규 창업	14	2	12
법인 등에 취업	2	1	1
기타	2	1	1
합계	38	14	24

○ 영농지역 선택과 그 이유

- 영농지역은 38명 중 28명이 고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명만이 지인과의 관계에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 영농지 선택 이유는 「취득할 수 있는 농지가 있어서」에 압도적으로 많은 25명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에 13명이 응답하였음. 지자체의 지원이나 도시와의 접근성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7] 영농지역 및 선택이유(복수응답)

영농지역		영농지 선택 이유	빈도
고향 지인이 있는 곳 기타	28 2 8	취득할 수 있는 농지가 있어서	25
		자연환경	8
		지자체의 지원 대책 등이 잘 정비되어서	2
		겸업이 용이한 지역이어서	2
		가족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서	13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1
		익숙한 지역이어서	9
		기타	4

○ 영농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

- 신규취농자에게는 취농에 필요한 경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확보에 있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획득 방법을 <표2-8>에서 보면 「지자체 등」에 27명이 「교육·연수」가 15명, 「인터넷」에 12명이 응답하였음

[표 2-8] 영농준비에 필요한 정보획득 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
지자체 등	27
유관기관	4
농업인단체	8
귀농귀촌단체	7
교육연수	15
전문가	8
인터넷	12
서적	5

○ 영농 시작 때 어려웠던 사항 및 지원사업 활용 여부

- 신규취농자는 보통 영농준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하고 나서 실제로 취농하게 되지만 그 때 어려웠던 점을 <표2-9>에서 보면, 예상과 같이 「자금확보」에 30명이, 「농지확보」에 24명이, 「영농기술 습득」에 20명이, 「주택확보」에 11명이 응답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지·자금·기술·주택 등의 확보가 어려움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영농 시작 때 행정적 지원 활용 여부를 보면 38명 중 15명(39.5%)이 활용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응답자가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영농 시작 때 어려웠던 사항(복수 응답) 및 지원사업 활용 여부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조언 및 컨설팅	8(7.0%)	지원사업 활용	15(39.5%)
지역선택	9(7.8%)	지원대상이었지만 이용 안함	5(13.2%)
영농기술 습득	20(17.4%)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대상이 아니었음	12(31.6%)
농지 확보	24(20.9%)	지원사업이 없어서 이용 못함	1(2.6%)
자금 확보	30(26.1%)	지원사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5(13.2%)
주택 확보	11(9.6%)		
작목 선택	9(7.8%)		
기타	4(3.5%)		
합계	115(100.0%)	합계	38

○ 영농 시작 때 활용한 행정적 지원 내용

- <표2-10>에서 영농 시작 때 활용한 행정적 지원 내용을 보면, 「교육 및 연수」에 28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고, 「자금지원」에 19명, 「농기계·시설」에 17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농지 알선」이나 「주거 지원」에 있어서는 앞에서 살펴본 영농시작 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0] 영농 시작 때 활용한 행정적 지원 내용(복수응답)

구분	빈도
교육 및 연수	28(39.4%)
농지 알선	5(7.0%)
농기계·시설	17(23.9%)
자금 지원	19(26.8%)
주거 지원	2(2.8%)
합계	71(100.0%)

○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연수 관련 내용

- <표2-11>에서와 같이 영농 전 응답자 모두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20회 이상도 11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표2-12>는 이수한 영농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것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32명이 이수한 「재배·사양기술」이며, 「기계 조작」 9명, 「농산물 가공」 15명, 「농산물 판매」 13명, 「경영관리」 19명이 이수하였음

[표 2-11] 영농 전 교육프로그램 이수 횟수 [표 2-12] 이수 영농 교육프로그램 내용(복수응답)

구분	빈도
4회 이하	15
5~9회	7
10~19회	5
20회 이상	11
합계	38

구분	빈도
재배·사양 기술	32
기계 조작	9
농산물 가공	15
농산물 판매	13
경영관리	19
기타	2
합계	90

- <표2-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농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이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36명 중 7명만이 높게 평가하였으며, 29명이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표2-14>에서는 이수한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로

서 「그 작목에 대한 관심도」 나 「실천적인 경영·기술 습득」 을 중시하면서도 「보조사업 선정」 에 도움을 받고자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도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표 2-13] 영농 교육의 효과성

구분	빈도
매우 낮다	9
낮다	6
보통이다	14
높다	6
이주 높다	1
합계	36

[표 2-14] 영농교육 프로그램 선택 이유

구분	빈도
실천적인 경영·기술 습득	9
그 작목에 대한 관심	14
내실 있는 교육이어서	2
보조사업 선정 도움	10
기타	3
합계	38

- <표2-15>에서는 영농 준비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가 16명, 「2~3년」 이 17명, 「4년 이상」 5명으로 2~3년 이하의 단기간에 걸쳐 영농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2-15] 영농 준비 기간

구분	빈도
1년 이하	16
2~3년	17
4년 이상	5
합계	38

- 영농 시작 시 선택한 중심품목과 규모

- <표2-16>에서 영농 시작 중심품목을 보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채류」 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는 대부분 2,000평 이하의 소규모로 영농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영농 시작 중심품목과 규모

영농 시작 중심품목	빈도	영농시작 규모	빈도
곡류	7	1,000평 이하	10
서류	5	1,001~2,000평	10
과실류	5	2001~5,000평	9
과채류	10	5,001평 이상	3
근채류	3		
화훼류	1		
축산	5		
기타	2		
합계	38	합계	32

○ 영농 초기 농지·주택·영농자금 확보 방법

- <표2-17>을 보면 농지 확보 방법은 구입했다는 응답자 수는 7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임차를 하거나 일부는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주택 확보 방법으로는 38명 중의 50%인 19명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이 없는 응답자도 5명 있었음
- 영농자금 확보 방법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응답자는 8명으로 매우 적었으며, 13명이 「보조사업이나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10명이 「은행 융자」를 활용하였으며, 「부모 지원금」은 5명에 불과함

[표 2-17] 영농 초기 농지·주택·자금 확보 방법

농지 확보 방법	빈도	주택 확보 방법	빈도	영농자금 확보 방법	빈도
구입	7	부모와 함께 거주	19	보조사업, 보조금	13
임차	12	신축	4	자기자본	8
구입+임차	15	기존 농가주택 구입	2	은행 융자	10
기타	4	기존 농가주택 임차	4	부모 지원금	5
		주택 없음	5	기타	2
		기타	4		
합계	38		38		

- 안정적 생활을 위한 희망 월 소득에 대해서는 「201~300만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로 답한 응답자 수도 11명, 「301만원 이상」에는 6명이 응답하였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38명 중 37명이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10만점 중 3점 이하로 평가)하였음

○ 농가경영 관련 요인에 대한 자기 충족도

- <표2-18>은 농가경영 관련 요인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5점 리커트 척도의 결과표임
- 대부분의 경영 요인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보통 이하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지·시설·농기계·운영자금·노동력·가공상품화 역량 등 지원이 많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 쪽에 쏠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재배·사육기술/선별·포장·유통역량/경영마케팅 역량/정보 획득/사회네트워크 역량 등 자신이 스스로 몸에 익혀야 할 경영 요인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관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표 2-18] 농가 경영 관련 요인에 대한 충족도 평가

농가 경영 관련 요인	부족 ← 보통 → 충분					합계
	1	2	3	4	5	
농 지	14	6	12	4	1	37
시설 및 농기계	10	12	7	6	1	36
운영자금(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투입재료 구입)	23	8	6	0	0	37
재배/사육 기술	9	6	12	9	0	36
노동력(영농일손관리)	20	10	4	1	1	36
선별·포장·유통 역량	11	8	10	6	2	37
가공상품화 역량	15	10	8	3	0	36
경영마케팅 역량	11	8	11	6	0	36
가격, 제품 관련 새로운 정보 획득	7	9	13	4	2	35
지역사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사회조직 활동 (농지·자금 확보 또는 전문성 개발, 판로확보와 관련하여)	9	7	11	6	4	37

- 농촌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적 여유 부족」과 「생활환경 불편」에 각각 10명이 응답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생활 확보」에 비교적 많은 8명이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소수가 「건강불안」, 「마을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불편하다고 답하였음

[표 2-19] 농촌생활의 불편사항

구분	빈도
시간적 여유 부족	10
건강 불안(노동이 힘들)	3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	1
마을사람들과의 인간관계	2
사생활의 확보	8
생활환경 불편	10
기타	2
합계	38

## 5) 참고 : 현재의 영농 상황

[표 2-20] 현재의 영농상황

현재의 영농 주품목	빈도	재배시설 확보	빈도	친환경농법 채택	빈도
곡류	14	비닐하우스	15	전 품목	6
서류	7	유리온실	1	일부 품목	10
두류	5	해당 없음	19	해당 없음	19
과실류	9				
과채류	14				
엽채류	3				
근채류	6				
화훼류	2				
축산	5				
약용작물	2				
버섯류	1				
합계	36	합계	35		35

농기수입 현황	빈도	생산조직 참여	빈도	향후 계획	빈도
농업수입만 있음	23	참여 안함	17	고부가 작목 도입	8
농업수입>농외수입	1	품목 연구회	7	규모 확대	11
농외수입>농업수입	4	작목반	13	기술 및 기계 도입	14
농업수입≒농외수입	3	영농조합	10	생산비 최적화	14
농외수입만 있음	3	협동조합	2	판로 확대	21
				직거래 확대	13
				농산물 가공	17
				관광농업	12
				농가레스토랑	5
합계	34	합계	49		115

## 6) 소괄

- 이상의 설문 결과 전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청년농업인의 경제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과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농가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농업인의 경우는 생활면의 문제는 물론 영농지의 인간관계에도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음. 생산면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면까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생산면과 생활면에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행정적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관리될 수 있는 지원책도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농지·주택·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단답형 설문조

사에서도 교육 등을 통한 재배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담보 없이는 자금확보가 불가능하며, 지원이 있어도 절차가 까다롭고 이율이 높으며 상환기간이 짧은 의견, 관련기관의 지원내용에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답변함

-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취농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나마 부모의 경영 기반 등 가정적 조건과 교육기반 조건 등이 신규취농 및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도내 출신 농가자녀의 경영계승을 촉진하는 시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임을 시사하고 있음

### 3. 정책동향

#### 1) 농식품부의 농업인 인력육성정책의 경과

- 1970년대 이후 이농인구가 급증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영농승계 인력이 급감함. 이러한 농촌인력의 양적 저하가 계속되면서 농업인력의 질적 역량의 감소를 배경으로 1981년 농업인후계자 제도가 시작됨. 기존 농업인력의 전문경영능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을 골자로 함
-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장개방화에 따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업농<sup>2)</sup> 및 농업법인 등 대규모 경영체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음<sup>3)</sup>. 그리고 1993년에 수립된 「신농정 5개년계획」에서 최초의 농업인 교육·훈련대책이 마련되어 농과계 고등학교를 후계인력 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한편,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고, 농과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을 설치하여 농업인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음.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후계자를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경영체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토록 했음
- 2000년 이후부터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상황이 더욱 더 심해짐. 이에 따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sup>4)</sup>, 귀농인 등 신규 취농자 확보, 농업경영체 권

2)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2년 후계자육성사업의 보완대책으로 추진되다가 1994년에 농업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995년에 영농규모화 사업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됨

3)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0년에 제정된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에 의한 영농후계자 육성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재원이 확충됨

4) 2001년부터 기존의 후계농업인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함. 즉, 기존의 후계농업인은 (재)신규후계농업인(40세 미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농촌 외부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농창업후계

- 선텅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통해 선도농을 육성하고자 함
- 특히, 2004년 2월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대책을 포함시켰고, 이를 구체화한 ‘정예 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내놓았음. 이를 통해 2013년까지 88천호의 정예 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 20만호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2004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연령 제한을 45세로 변경였고, 2005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와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창업농후견인제도<sup>5)</sup>, 농업인턴제<sup>6)</sup>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sup>7)</sup>’이 시행되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근거법령이 2010년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고, 연령제한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하였으며,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상환기간을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서 10년(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축소 조정함
  - 위와 같은 정책들은 농업생산분야의 경영 및 노동인력에 한정하여 신규 농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컨설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한편, 귀농·귀촌 정책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정책사업이 시작되었음
    - 현재 농식품부는 귀농·귀촌과 농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및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매년 3만호 수준의 귀농·귀촌 유치와 2030 청년 귀농창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벤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정책 추진 단계를 관심단계 → 실행단계 → 정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교육 및 기술지원·멘토링 등을 통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

농업(35세 미만)을 구분함

5)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농업계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서 창업농을 지도·지원하는 제도이며, 후견인에 대해 월 50만원의 지도지원비가 지급됨

6) 농업인턴제는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농업계 대학 재학생 등 잠재적인 후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턴 채용농가는 농업인턴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50%를 지원함

7)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은 우수후계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자금이 지원됨

- 재정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 귀농·귀촌 교육,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운영 등이 있음(〈표21〉 참조)

[표 2-21]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 현황

추진기관	사업명	사업량 및 지원 규모	예산(국고+지방비)
농식품부 ↓ 지자체 (지방비 50%)	도시민유치지원사업	55곳(광역2곳, 기초53곳)/ 지자체당 2억 원	연 110억 원
	귀농인의 집	57개시군에 225개소 - 개소당 30백만 원(년 70개소)	연 21억 원
	체류형창업지원센터	8개소/ 개소당 80억 원	연 240억 원
	창업/주택자금 지원	창업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50백만 원	연간 규모 1,500억 원
농식품부 ↓ 종합센터	귀농귀촌활성화사업 센터운영	국가보조 100%	연 45억 원

자료 : 농식품부 내부자료(2016.5.24.)

## 2) 2016년도 농식품부 신규 시책

-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 유입 촉진을 통한 농산업 인력 기반을 공고화한다는 대책으로 전국 300명의 40세 미만 청년에게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신규취농의 잠재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그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으로 이를 지방 차원에서 강화·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또한,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임대지원사업(시범사업)을 개시했음. 이는 특히 귀농의 애로요인으로 자금부족에 이어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등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7개도 26개 시·군<sup>8)</sup>을 선정함
  - 매입대상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3㎡ 이하 농지로, 매입 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내지 5년간 임대 지원한다는 내용임
- 위의 두 신규사업은 바람직스런 정책사업이라 생각되지만, 사업규모 면에서 우리 지역의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기에선 너무나 미미한 수준임

8) 전라북도: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 8개 시·군이 선정됨

### 3) 전라북도 정책 동향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중앙정책)
  - 사업비는 후계자별 농업창업자금 2억원을 지원(2%, 3년거치, 7년상환)하여 농지 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비용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영농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농경영기법과 품목별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국고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 5년이 경과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경영확대 및 규모화를 위하여 국고융자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이자율 1%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은 <표2-22>과 같음
  - 한편, 후계농업경영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시 영농복무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표2-23> 참조)

[표 2-22] 전라북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명)	'81~'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국	140,289	123,329	1,050	1,044	1,507	1,705	1,435	1,559	1,500	1,564	1,849	1,861	1,886
전북	17,355 (12.4%)	14,271	215	241	219	264	235	289	279	312	353	338	339 (18%)

연도	선정 인원	사업비 (백만원)	성별		영농형태		영농경력		연령대		
			남	여	경종	축산	신규	기존	20대	30대	40대
2014년	338	58,557	264	74	307	31	207	131	74	90	174
2015년	339		242	97	300	39	262	77	79	100	160
2016년	335	63,002	259	76	294	41	246	89	84	110	141

[표 2-23] 전라북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현황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현역	보충																		
24	2	18	2	20	2	31	1	31	3	16	3	21	2	26	-	25	-	37	3

-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전문컨설팅업체가 계약 농가 등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 을 통하여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임
- 개인에게는 10백만원, 기초농업경영체에게는 20백만원, 전문농업경영체에게는 30백만원을 자비 50%를 조건으로 국고 30%, 도비 6%, 시군비 14%를 지원하고 있음
  - 2016년도 지원대상은 66개 개인농가, 18개 법인으로 예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은 정부정책에 맞추어 관심단계 → 실행단계 → 정착단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표2-24〉, 〈표2-25〉, 〈표2-26〉 참조)
- 관심단계부터 실행, 정책단계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심단계에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심적이며 이를 전라북도가 설립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실행단계는 다른 지자체보다 주거공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귀농인의 집 사업도 전국 약 300개세대 중 전라북도가 70세대를 차지하고 있음. 농식품부의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사업도 고창에 유치하여 추진 중이나 규모 대비 세대수가 매우 적음. 그래서, 체재형 시설을 13개 시·군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10가 구씩을 조성하고 있음
  - 정착단계에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나 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수도권 상담홍보,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주거공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도비 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활성화 사업,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2-24] 중앙정부 등과의 연계된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정책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농림축산 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1개시군	2,200	
	귀농인의 집 시설	22동	720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고창군	4,000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30명	250	신규(9개월)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1개소	-	
농진 흥청	영농정착 기술교육	440명	220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72명	432	
농정 양회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순	150,000	전국
	주택 구입자금			
	농업경영자금	농업인	10	금리3%
농업 어촌사	농지 매매사업	1,217ha	88,600	1%, 15~30년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2,200ha	53,600	5~10년
	농지 교환·분합사업	8ha	800	1%, 10년 균분
	경영이양직접지불제	18,500ha	58,044	3,000천원/ha
	농지연금사업	지가 2억	84만원/월	중신형(70세)

자료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제공 자료

[표 2-25] 전라북도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정책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전라북도	도시민 귀농귀촌 상담	13개시군	120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13개시군	228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13개시군	52	
	수도권 귀농학교	10개시군	307	
	토지 및 주택정보 구축	13개시군	100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13개시군	589	
	임시 거주시설 조성	5개소	2,450	2개 사업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귀촌인 농촌체험 활성화	순창군	200	1년차
	전라북도 지원센터 운영	1개소	340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	1식	354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개소	200	
전북농협본부	농촌유학 활성화	1식	45	
	전북 농수산물 발전기금	153억	2,000억	1~2%

자료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제공 자료

[표 2-26] 전라북도 시·군별 귀농·귀촌 관련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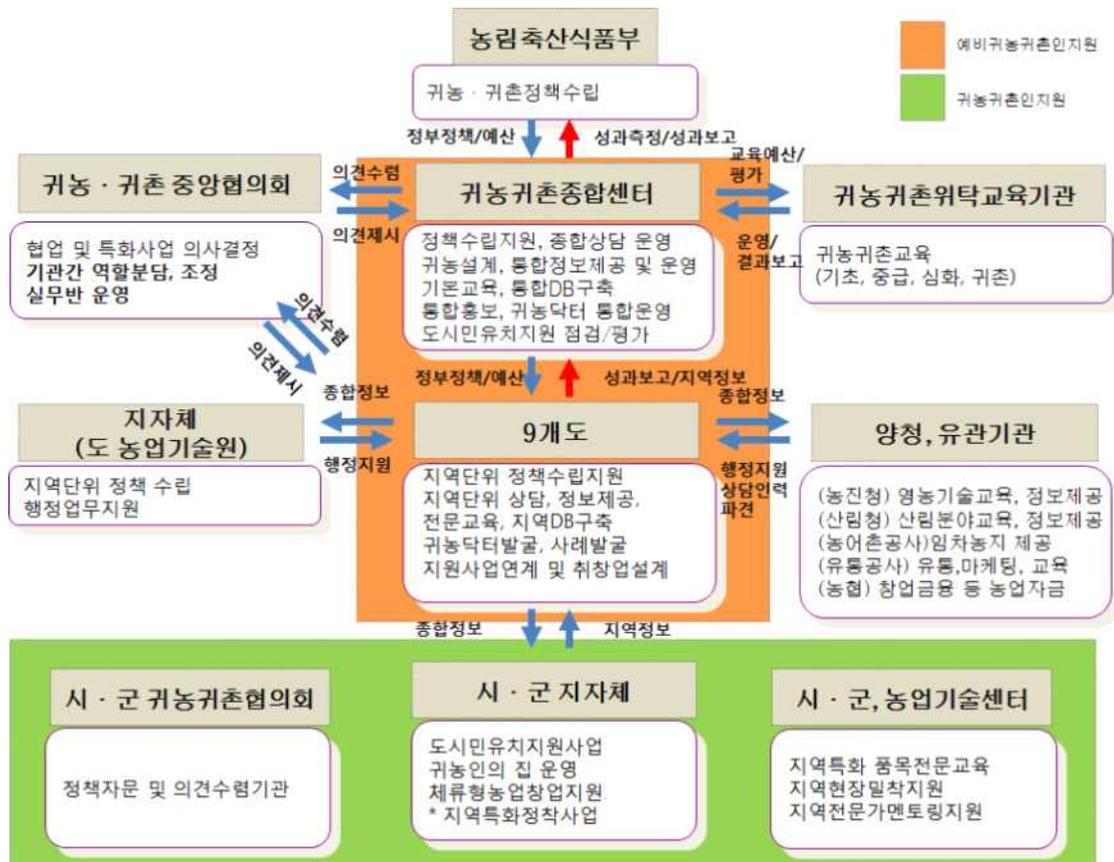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군산시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12농가	30
정읍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호	100
	귀농인 이사비 지원	20호	10
남원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5호	90
	소규모 샵터조성 지원	5개소	330
김제시	귀농귀촌인이사비 지원	100호	10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호	100
완주군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20호	100
	귀농귀촌 활성화 교육	10명	35
	주택매입, 수리, 신축비 지원	30호	150
	귀농인 농지매입, 임차비 지원	20호	50
	귀농귀촌인 출산장려금지원	5호	6
	귀농귀촌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6호	96
무주군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15명	30
	귀농귀촌인이사비 지원	30호	15
임실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호	28
	귀농귀촌 정착 지원	50호	100
	귀농귀촌 현장실습비 지원	15호	45
	귀농귀촌 교육훈련비 지원	10호	5
순창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30호	600
	주택구입 및 신축 수리비 지원	25호	180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	60호	430
고창군	귀농자 소득사업 지원	45호	900
	귀농귀촌인이사비지원	150호	150
	귀농귀촌 우수마을 인센티브지원	4마을	100
고창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	24호	120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400호	400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3개소	300

부안군	귀농귀촌 유지 우수마을 지원	2마을	60
	고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개소	100
	도시민 은퇴자 귀농귀촌 체험	5회	50
	귀농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	12호	60
	귀농인 빈집 수리비 지원	12호	50

자료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제공 자료

- 2015년도에는 4,990세대가 귀농·귀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됨. 그 중 귀농이 약 1,700세대, 귀촌이 3,200세대로 나타났음
- 현재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센터와 지자체에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센터와 지자체는 사업의 실행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후 ‘귀농귀촌중앙협의회(가칭)’를 신설하여 정책 조정기능 및 관계기관 연계프로그램 등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임(〈그림2-2〉참조)

(그림 2-2) 강화되는 귀농·귀촌 정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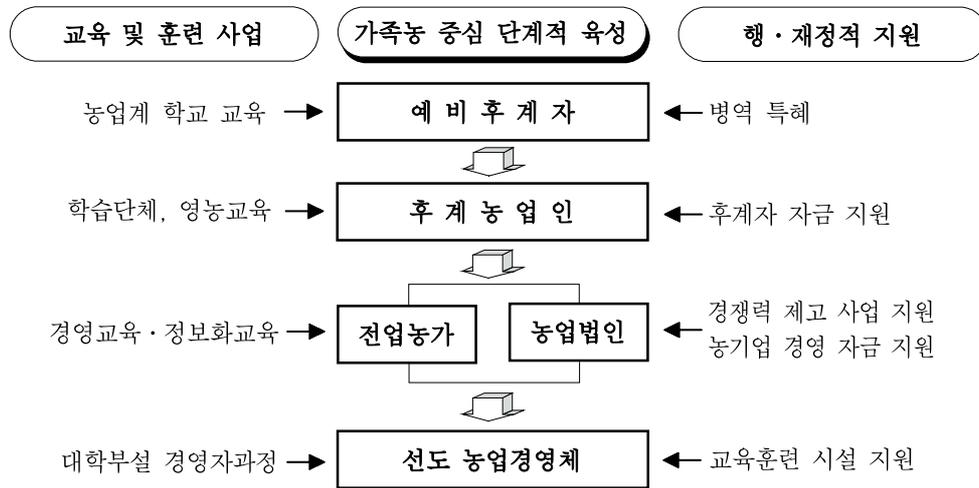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2016.5.24.) 자료

## 4. 새로운 미래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방향

### 1) 미래농업인력 확보·육성단계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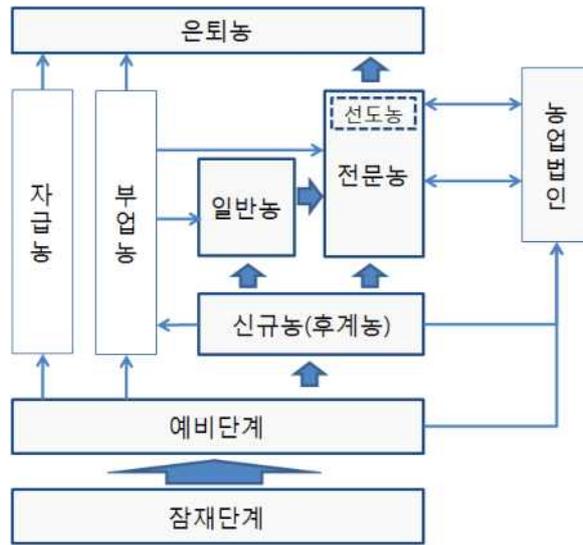
- 마상진 외(2011.4)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인력육성 정책은 크게 농업계 학생에 대한 교육 단계, 후계농업인 단계, 기존 농업인 정예화 단계, 선도 농업인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왔음<그림2-3>

[그림 2-3]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체계(농림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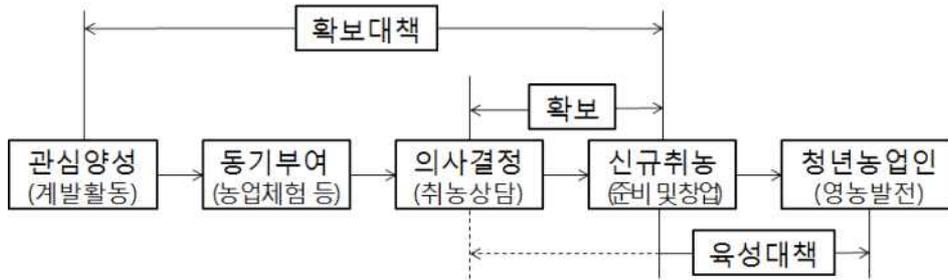
- 이에 마상진 외(2011.4)의 연구에서는 주업 농가(전업적 농가)를 중심으로 잠재·예비 단계 재설정 및 은퇴 단계를 추가하여 ‘잠재단계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정착단계 → 은퇴단계’ 등 농업인력육성단계를 5단계로 설정함 <그림2-4>

[그림 2-4] 농업인력육성의 단계



- 같은 연구에서 위와 같은 설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관점의 현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초·중등단계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인력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인력육성과 관련한 투자는 대상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 제안된 내용임. 지금까지의 농업후계자 육성 정책은 취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왔음
- 이와 같은 맥락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에 한정된 정책 전개 시점에서 ‘관심의 양성(계발 활동) → 동기부여(농업체험 등) → 의사결정(취농상담 등) → 취농(취농준비 및 창업) → 청년농업인(영농발전)’ 등 5 단계로 나누어 정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함
- 또한 <그림5>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상식적인 견지에서 개인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게 되는 일련의 취농과정까지의 과정, 즉, 「관심의 양성」부터 「동기부여」, 「의사결정」을 거쳐 「취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확보과정」이라 하고, 「의사결정」 및 「취농」을 거쳐 「청년농업인」으로 육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육성과정」이라 함
- 이렇게 하여 각각의 과정에 대한 행정 등의 노력을 「확보대책」, 「육성대책」으로 나누어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즉, 전북의 미래농업인력으로서 청년농업인의 「확보대책」과 「육성대책」을 명확히 분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

[그림 2-5] 농업인력 확보 대책과 육성 대책



- 왜냐하면, 신규취농의 경우 정착실패<sup>9)</sup>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계별로 나누어 지원정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각 단계에 맞춰서 지원대책의 필요도에 차이가 있으며, 확보단계에 있어서는 신규취농 대책으로서 재배기술 습득이나 농지·기계 확보, 주택 확보, 자금 확보가 특히 필요하고
- 취농 후의 단계에서는 노동력 확보나 수입 안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 및 융합의 필요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원대책은 지역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지원주체가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 지원주체로서 지자체와 농업법인, 농협 등을 들 수 있음

## 2) 각 단계별 지원 대책의 방향

- 전라북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속에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사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임
- 의사결정에서 취농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에서 기술습득 지원 내실화
  - 대부분의 신규취농자는 영농규모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습득·향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도 기술습득 지원이 특히 중요함. 농식품인력개발원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취농 후 영농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기술습득 지원 강화
  - 취농 후 청년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화된 기술 습득이 필요하기

9) 신규취농자는 잘 정착하면 지역농업 및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착실패의 경우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경제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임

때문에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조직화와 연계 추진하여 정착을 촉진하고, 정착실패에 의한 이농을 억제할 필요

- 의사결정 후 준비단계에 있어서 조건정비 지원 강화
  - 취농준비에 있어서는 주택 등 조건정비에 비용이 많이 들고, 양호한 농지나 농자재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농준비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 실천적 연수 기회 제공
  - 신규취농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취농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자가 원활한 취농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과 유관기관에서 실천적인 기술이 습득될 수 있는 연수기회 제공을 도모해야 함
  - 또한, 농업법인 등에의 고용을 지원하면서 고용을 통한 취농희망자의 실천적인 연수 기회 확대를 연결되도록 해야 함
- 영농에 적합한 농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취농희망자에게는 농지 확보 및 시설의 도입과 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지역의 농업인이나 지자체 농협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영농에 적합한 농지나 주택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취농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농업계 학교의 역할 강화와 농업계 학교 출신자에 대한 확보대책 구축
  - 예비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취농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초·중·고학생들에게는 영농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규 취농자에 대한 영농 상담컨설팅 등의 예비 신규취농자 유도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유기농 및 환경농업관련 각종 취농 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실적으로 지역(시·군)에 따라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신규취농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신규취농 수용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경영승계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인력확보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이며,
  - 다음으로는 비농가 및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신규취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미래농업인력 육성 목표 및 과제 설정을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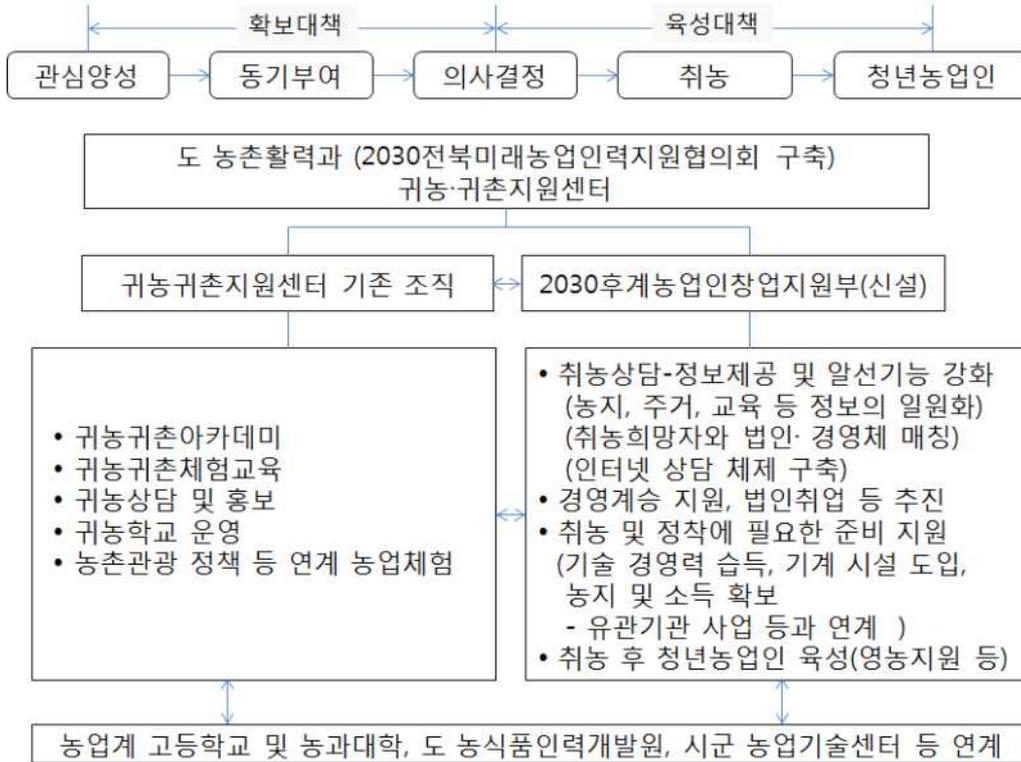
-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대책 중 신규 청년농업인 확보 대책으로는 예비농업인력이라 하여 농고·농대 교육 지원(전국 19개 농고, 15개 농대 대상)과 후계농을 선정(전국 현원 113,654명) 및 우수후계농 인증을 통해 후계농업인을 양성한다는 사업, 그리고 우리 도에 입지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이 그나마 우리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책 사업이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상 수가 현실에 비추어 너무 적은 수에 불과함.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과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도 마찬가지임
- 결국, 전라북도의 농업 및 농업인력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은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창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따라서, 전라북도 독자적인 대책이나 시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인력 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를 발굴해야 함

### 4) 미래농업인력의 종합적 육성체계 재정비

- 현재 전라북도는 신규취농자 및 청년농업인 육성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확보과정에서 육성과정까지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이 없이는 인력 확보의 효과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교육·연수 수용 체계 재구축과 취농지원 조직 조성이 필요함
  - 일본의 각 지역에 존재하는 농업후계자센터, 신규취농상담센터, 청년농업자등육성센터 등의 사례를 검토·도입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전달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잘 정비·운영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신규취농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청년들이 귀농·귀촌 후 취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 센터를 확대 재편하여 효율성을 기해야 함
- 또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군 등과의 연계체계를 활용하여 도와 시·군 인력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해야 함
- 특히, 최근 귀농·귀촌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농촌에 들어오는 인력이 많아지고 있고, 그들에 의한 농업경영 창업 노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함

[그림 2-6] 전라북도 미래농업인력 육성체계 예시



## 5) 영농승계 촉진 정책 마련

- 영농승계 및 경영이양 활성화 사업 추진이 필요함. 전라북도의 현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업화 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 기존농가의 경영승계를 촉진하는 일은 영농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며 70세 이상의 경영주 농가가 급증하는 전라북도 상황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농업인력 확보 방법임<sup>10)</sup>
- 영농승계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후계 영농인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경영승계 신규취농자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에 대한 융자지원도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음
- 현재 영농승계자 교육을 농식품인력개발원이나 대학 등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

10) 마상진 외(2011, 4)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농가승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보다 1% 정도만이라도 경영승계 비율이 높아진다면, 매년 1만 명 이상의 경영기반을 가진 신규인력이 추가로 확보 가능하다고 보았음

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경영승계 신규취농자에 특화된 영농정착자금에 대한 융자지원도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 나아가서는 제3자 경영계승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 먼저, 제3자 계승을 희망하는 농가 등이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6) 비농가 출신자 등 신규 진입 취농 촉진 및 정착 지원체계 강화

- 비농가 출신자는 지역에 적응 문제 등에 있어서 농가 출신 자녀와 비교하여 장벽이 높음. 그것이 정착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그래서 이들이 조기 정착 및 경영안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농가에 의한 재배기술·경영·판매 지도 및 지역예의 적응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야 할 것임
- 도시 및 비농가출신의 신규 취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추세를 유지 또는 확장할 수 있게끔 영농경험이 없는 신규취농자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신규 취농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임
- 신규 취농에 대한 토지구입 및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영농컨설팅 비용지원 등 신규 취농에 대한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농업계 고등학교·대학생의 신규취농 촉진

- 농업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특히 ①초중학교 교육의 개선(자연, 생명, 환경, 식품에 대한 동기부여), ②농업계 고교와 농대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검토, ③교육·연구·기술의 연계에 의한 농업기술교육의 충실 등이 장기적 시점에서는 가장 의미 있을 것임
- 최근 농업여건에 맞도록 농업대학교 등에서 실천적인 농업기술 및 경영관리 기법의 습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영의 발전단계에 맞는 능력·기능을 갖춘 인재를 양성
-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대 학생에게는 각종 장학금 제도의 대상으로 하여 도내에 취농한 경우 반환금을 일부 면제하는 등의 지원조치(일본 가가와현 사례)

## 8) 여성 신규취농 지원

- 최근 여성들의 농업 취·창업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장려할 수 있는 대책 추진
- 여성농업인은 지역농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발전, 6차산업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여성 그룹의 조직화 및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9) 신규사업 예시

- 취농계획 인정제도의 도입(일본 미야자키현 사례)
  - (목적) 미래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인으로 발전하려는 청년 등의 취농을 촉진하기 위함
  - (방법) 취농하려는 청년 등이 농업기술 또는 경영방법을 현장에서 습득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계획 작성하거나, 청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농업 관련 법인이 작성하는 농업기술 및 경영방법을 현장에서 습득하기 위한 연수 계획을 지사가 인정
  - (지원) 취농계획을 인정 받은 청년 등에게 중점적으로 취농지원조치를 강구
- 청년농업인 장학재단 설립(도, 시군, 농기업 등 출연) : 취농 가능 학생 대상 대여장학금 등 지원
- 신규취농 멘토 지원 사업
  - 신규취농자가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관습, 농지취득, 농업기술 등에 대한 상담자로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구축 지원, 생활상의 문제 등까지도 지원하는 멘토농가를 지정하여 농업 유관기관이나 시·군 등과의 연계 하에 1:1 지도가 가능토록 함
  - 멘토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취농자와 멘토농가 간의 연계관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경영을 확대해나가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농가자녀 농업계승 지원 사업
- 농업법인 취업 인턴제
  - 들녘별경영체 등을 포함한 농업법인으로서 신규취농자 고용 수요 등을 조사하여 인턴제 고용의 경우 지원 사업 실시. 신규취농자에 대한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을

익히는 계기와 법인육성을 동시에 추진

- 시군별 중점 전략품목에 대한 후계자 육성 확보 사업
-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
  - 신규취농자 확보 및 육성에 가장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생각되므로 중앙정부에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확대 운영

## 지정 토론문

- 김사균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팀장
- 김성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장
- 김정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서병준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 신용광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과 교수
-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
-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 토론문

김 사 균 /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팀장

### 1. 첫 번째 발제문 요약

#### □ 분석 및 접근

- 전북지역의 신규취농과 창농지원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 마을단위의 전출입 분석을 통해 농업인력의 부족현상을 데이터로 증명
- 문제점
  - 청년층 부족, 인력육성정책과 사업부재, 이해당사자 관련 거버넌스, 지자체 자원과 농산업계, 농업계학교 등과의 연계활동 부족

#### □ 해결방안

- 전북농업인력 육성 가용자원(①학교:농고·농대, ②농업관련기관:농촌진흥기관(지도, 연구)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③WPL, ④중간지원조직, ⑤농협, ⑥전부건 등 공공기관, ⑦농업인과 농산업체-선도농업인, 농민단체, 농업법인, ⑧전후방농산업체, ⑨농업농촌건설팅업체, ⑩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연관조직) 구명 및 리스트화
  - 매우 고된 작업에 감사
- 농업인력 육성 계획 수립 및 관련자원 연계
  - 도 차원의 농업인력 육성목표 설정
  - 전북 농업인력 육성 거버넌스
  - 우수 인적자원 농업계열 유치 및 단계적 안착지원
  - 젊은 귀농·귀촌 인력을 신규 농업인력으로 유치

- 도 자체 농업 취·창업지원 시스템
- 우수농업교사 교수 자원 육성

#### □ 시사점

- 우리의 (인적)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방치하고 있다,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음, 전후방이 그래도 이나마 존재하는 것은 농업의 대단한 저력, 잠재, 성과임
- 마상진 박사의 문제접근 시각에 매우 동의, 자원의 총합화 노력이 매우 중요

## 2. 두 번째 발제문 요약

#### □ 분석 및 접근

- 가장 최근의 통계치를 준용하여 전국단위 및 전북, 전남지역 인구통계학적 변화추이 분석
  - 전업농 및 정예농업인 육성 정책 등은 있었으나 젊은 층, 신규취농자 정책 미미
- 핵심쟁점
  - 청년농업인 중 특히 신규졸업 취농자나 귀농인, 신규 진입 취농자 확보방안, 과제발굴, 대응방향, 신규취농 청년이 농촌에 정주조건, 그 개선 정책, 지역 대응 과제

#### □ 해결방안

- 미래농업인력 확보 육성을 위한 필요조건 검토
  - 신규취농 확보(국가적)를 과제로 한 문제와 농업경영 계승(가계적)문제를 다른 차원의 동일한 범주로 해석 : 나름대로 경쟁력 갖춘 경영체 역시 유희화
    - 현재의 농가는 대한민국의 인적·물적·정신적 총체적 투입의 최종결과,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
  - 신규취농의 의미 : 정착, 성공, 실패, 파급효과, 창업과 경영계승(3자 계승)
  - 우리나라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집착은 국민적 성향
    - 강한 소유성향, 혈연관계유지, 공동활동에 대한 불신은 최대 장애요인이자 장점으로도 볼 수 있음
  -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요인으로 자본요인, 전문성 요인, 시장요인, 사회네트워크 요인 등 네 가지로 정의(마상진 등)

- 신규취농자를 위한 지원이 운영자금이나 전문성 개발 지원에 치중
- 사회 네트워크 진입장애 해소 과제 ①영농도제 프로그램, ②농장(법인체) 취업활성화, ③신규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 자본 관련 진입장애 해소 ④신규취농자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
- 전문성 관련 진입장애 해소 ⑤신규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⑥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⑦농업계 학교의 영농관련 교육 지원
- 시장 관련 진입장애 해소 ⑧생산자 조직 인센티브 부여 및 교육 등의 과제 제시
- 신규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및 취농 촉진 인프라 형성 ⑨신규취농자 관련 통계 개선, ⑩대국민 농업교양교육 강화, ⑪신규취농 지원체제 구축 등의 과제 제시
- 지역농업전략과 연계한 신규취농 지원 방법 : 지역농업 작목선택 등
- 지역의 대응방향
  - 지역차원의 종합적 전략 재구성 : 조직화된 지역농업, 마을영농조직 구현
  - 신규취농자를 지역농업 경영체 육성 : 취농희망자 기술경영노하우 지원
  - 6차산업화 정책과 연계한 인력확보대책이 중요
  - 중간지원조직 기능 강화 및 확대·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및 교육체계 재편성
  - 신규취농자 확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직접지불제 도입·확대(월 80만원)
    - 신규취농에 관한 상담창구의 설치·확대, 정보 네트워크의 정비
- 시사점
  - 제안 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진정성, 정성과 영혼을 담은 정책제안
  - 각 제안별로 심도높은 정책대안 작성에 관계기관 노력 : 특히 중앙정부, 진흥청

### 3. 토론제안

- 분석 및 접근
  - 신규취농과 창농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
- 문제인식
  - 귀농창업교육의 양적·질적 미흡
    - (창업지원 미흡) 신규농업인의 「귀농창업」 관련 지원이 미흡하며, 몇 몇 곳에서

- ‘창업가 또는 기업가정신’ 을 강조하고 있으나 체감 있는 성과가 지연되고 있음
- (교육지원 미흡) 평생교육의 수준에서 기술창업 위주의 분야별 특화된 창업교육 확대 및 각 농촌진흥사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 귀농창업 친화적 지원체제 미흡

- 농업창업 경험 및 기업가 정신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프로그램 미흡
- 관련 콘텐츠 및 전문가의 절대적 부족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에 애로
  - 창업학은 횡단적 학문으로서 기술, 디자인, 인문, 경영 등 다양한 학문의 종합이 필요하나, 다양한 해당 콘텐츠의 개발이 부재
  - 창업 전담 전문가, 관련역량 보유자, 창업 경험을 보유한 농업인, 컨설턴트 등 전문가 양성 및 인력풀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창업도전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원 미비

“자본금과 기술이 없어 창업하기 어려움”  
(귀농현장실습교육 참여 농업인 참석자 발언, '15. 5월)

- 기술, 지식, 경험부족으로 인해 귀농창업인의 성공률이 낮아, 고급기술·시설·자금 지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
- 농업창업에 대한 민간 지원기능의 미비에 대응한 국가 수준의 창업지원 기능 정비 및 자발적 창업활성화 사업 절실

○ 사회 전반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창업은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할 경우 재기가 불가능”  
(기초영농실습교육에 참여한 신규농업인, '15. 7월)

- 한국은 주요 국가 중 창업가 및 창업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낮은 편으로서, 잠재적 창업가의 과감한 도전을 저해

[표 1] 주요국의 창업가에 대한 인식 수준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30.3% (28/29)	73.4% (4/29)	31.5% (27/29)	43.3% (20/29)	61.5% (8/29)	46.5% (19/29)	40.2% (23/29)

자료 :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0 (OECD 2011)

-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수익성, 높은 위험 등의 경제구조 하에서 대다수의 신규농업인들은 적극적인 창업 도전 회피

\* 창업에 대한 올바른 접근 등 내실있는 창업지원 필요

○ 기존의 귀농활성화 지원사업 연계한 귀농창업설계 지원으로 귀농창업정책 코스트의 경감

- 시군단위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형 귀농교육과 연계
- 농업분야 스타트업 창업교육(영농기술 기반)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창업전문가를 통한 창업기술 자문·컨설팅, 소자본 창업기반 지원
  -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권리화(지적재산권 등) 지원
- \* 지방농촌진흥기관 영농기술 및 경영컨설팅 등으로 특화된 창업정보제공

## □ 해결방안

○ 사업방향

- 귀농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지원거점 육성
-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농업인의 농업창업 성공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귀농인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화역량 개발지원

○ 사업예산 : 귀농창업센터 운영, 교육, 위탁,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활용

○ 핵심방향

① (선정) 지원금보다 스스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신규농업인

② (도별목표) 20명 정도 → 창업모델이 구체화되도록 지원

\* 자율적 경영 의지가 있는 신규농업인 자율신청,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③ (교육)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등 내실있는 창업교육 추진

\* 과정 :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귀농창업비즈니스과정, 귀농기술창업과정

\* 기존 : 이론 위주 창업교육 ⇒ 변경 : 실습, 발표, 무형식학습으로 교육추진

④ (역량강화) 창업코치로서의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농업창업코치 양성 기본과정 : 2박3일 담당자 역량강화과정 실시(3~4월)

\* 창업지원컨텐츠 지원 : 창업교육프로그램, 농업창업액션플랜노트

⑤ (코칭지원) 귀농창업센터 내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활용 운영

\* 귀농창업센터 내 : 내부전문가, 농촌진흥공무원 등

\* 외부협력 : 창조경제혁신센터, 6차산업, 종합가공지원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⑥ (자율모임) 창업교육 후 창업성공 자율모임체 등 조직화 지원(시군단위)

\* 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모임체 프로젝트 추진(지속관리)

⑦ (창업모델 작성 및 교육 추진) 창업모델 작성법 지도 및 창업교육 실시

\* 매뉴얼에 입각한 창업교육 추진 (교육결과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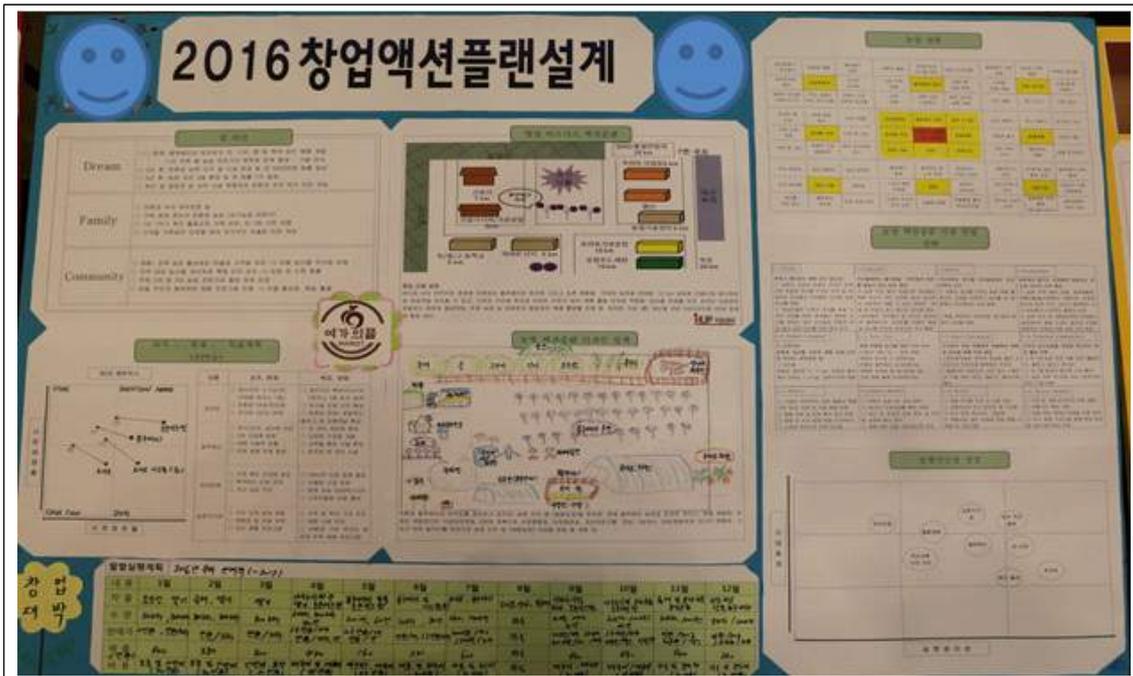
⑧ (창업컨설팅) 지자체별로 창업컨설팅 추진 가능 \* 코칭과 별도 추진

⑨ (창업모델개발대회) 창업모델개발대회를 기반으로 일자리모델 확산

○ 창업교육 업무체계

과정	구분	주요 행정절차 및 추진방법
과정1	①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기본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지침 수정 재송부(청)</li> <li>·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li> <li>(2) 귀농창업비즈니스과정</li> <li>(3) 귀농기술창업과정</li> </ul> </li> </ul>
	② 시군단위 창업교육대상 후보자 선발 (도 농업기술원으로 2배수 이내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단위 교육대상 후보자 선발(서면평가 등 후보자 선발, 시군에서 2배수 이내 추천 → 도송부) ※ 후보자는 온라인학습 필수</li> <li>· ※ 평가기준(안) 송부, 도에서는 지역안배</li> <li>· ※ 심화코칭대상자 고려, 중도포기자를 고려한 후보자 추천</li> <li>·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청), 창업교육업체 사전모색(자료공유)</li> <li>· ※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교육은 위탁 및 강사지원 가능, 심화코칭은 위탁사업화 (단, 교육지원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li> <li>· 농식품부 청년 농산업창업 인턴 약간명 참여</li> </ul>
	③ 도농업기술원 교육대상자 최종선발(서류심사, 약간명 추가선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에서는 50% 인원에 대해 지역안배, 그 외 역량 및 창업의지에 근거하여 후보자 선발가능</li> <li>· 창업교육 수행 적격업체 선정(긴급발주, 추진안을 성실하게 추진할 교육추진업체 선정)</li> </ul>
	④ 도단위 창업교육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및 교육대상자에게 「농업창업액션플랜노트」 공유</li> <li>· 창업교육 수행업체에 대한 사업설명 및 창업교육 수행업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추후공지)</li> </ul>
	⑤ 창업교육결과 및 개인별 평가표 시군 송부(보안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창업액션플랜」 심사</li> <li>· 개인별 교육평가 결과 시군통보</li> <li>· 핵심결과 청 보고(세부보고양식 추후통보)</li> </ul>
과정2	귀농창업비즈니스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는 시군으로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 교육계획 통보</li> <li>· 시군은 도로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 교육대상자 추천</li> <li>· 농식품부 청년 농산업창업 인턴 적극 참여</li> <li>·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 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교육은 일회성 특강교육으로 추진(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위탁업체 선정 후 위탁업체의 도움을 받아 실시, 6~10월 실시)</li> </ul> </li> </ul>
과정3	귀농기술창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창업비즈니스 과정」 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귀농창업모델개발과정” 교육이 종료된 이후 창업지원팀과 협력하여 박람회 형식의 교육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교육장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청담당자, 도원당당자, 6차산업, 종합가공지원 등 협력기관 총망라 함</li> </ul> </li> </ul>

○ 창업교육 추진성과(아래 사례의 외부활용은 반드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거쳐야 함)



1박2일 × 4~5회과정을 거쳐 생산된 신규농업인의 창업액션플랜



신규농업인의 창업액션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농업인의 경영계획 물입



## 창업지원 및 비즈니스모델 추진전략 체계도

- ◆ 농업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 구현 기여
- ◆ 6차산업화 역량 통합적 지원 → 일자리 창출, 다양한 창업모델, 창업생태계 구축

핵심과제	사업유형	주요사업 및 내용	성과	시군사업인원	사업인프라	
농업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농업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	기초영농교육	· 학습기술향상도 · 비즈니스기술수준	· 신규농업인 · 4,520명	· 기초영농교육컨텐츠 · 현장실습보고 온라인 시스템 · 비즈니스전문가 풀 · 도별 순회 교육지원	
		현장실습교육	· 선도농가 비즈니스모델교육 · 기술+비즈니스역량교육	· 실적보고서 · 기초사업계획서	· 신규농업인청년 · 517명	
		농업비즈니스 역량강화교육	· 농업비즈니스모델 개발 · 맞춤형비즈니스모델교육+기초코칭 · 창조, 융합, 협업, 혁신	· 비즈니스모델비즈니스 사업계획서	· 신규농업인 청년 귀농희망자 등 · 도별 200명	· 비즈니스교육프로그램 · 비즈니스전문가양성 1) 공무원 : 300명 2) 특별코치 : 10명 (교수 등 자문단) 3) 전문가 풀 : 30명
		사업화 지원 (공무원)	· 교육담당+6차산업담당자 · 창업지원역량 배양	· 업무개선방안 · 사업화지원계획	· 교육담당자, 6차산업 담당자 · 300명	
일자리 창출  농업농촌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 6차)	창업지원 · 사업화	창업경진대회	· 대상: 창업희망자, 교육수료자 · 주요사업: 창업모델 구현, 창업경진, 심화코칭 · 공고선발->경진 등->사업화자금 · 전문가에 의한 성과향상 심화코칭	· 창업비즈니스 실행모델 · 성과분석보고서 · 코칭이행보고서	·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지원방식) · 도별 우수사례발표 · 창업성과보고 · 창업 코칭 결과보고 · 우수창업사례성립발표 1) 소득우수: 00명 2) 모델우수: 00명 3) 실천우수: 00명	
		창업화 및 사후관리	· 대상: 창업교육수료자 등 · 주요사업: 6차가공센터, 창조경제 혁신센터, 귀농귀촌활성센터 연계 · 사업추진: 코칭 & 컨설팅 · 최종결과물: 창업실적, 소득구현	· 소득향상보고 · 사업자등록증 · 창업실천보고 · 성공사례	· 창업 사후 관리대상자 관리 · 창업시드머니 지원 대상자 및 창업교육 우수수료자	

창업지원 비즈니스 모델 추진전략 추진체계도

###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교육 확대 재편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지역 농산업 경쟁력 제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체계도

## 토론문

김 성 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장

### 1. 제안방향

-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은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할 때는 임기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최근에는 김천 일자리지원센터 등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자체 사업 추진과 성과에서 시작하여, 중앙 정책사업으로 확대되어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전북 미래농업인력 확보 및 양성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단순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농업인력육성계획 수립 → 이에 따른 제도와 조직, 인력의 확충으로 동력 확보 → 세부전략 실행 등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전북은 물론, 현재 국가적인 미래농업인력 확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리고, 미래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계 관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즉 최근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농업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용 등의 과제를 활용하여 우수 학생의 농업 관심 유도 등을 위해서는 교육청, 중학교 교장·교사 등 협력이 적극 필요함. 따라서 농업계 외에 미래농업인력 양성에 관계되는 주체들의 참여와 실행을 끌어내는 조직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 본 토론문에서는 제도·조직 등 인프라 측면, 사업 측면으로 나누어서 의견제출하겠음

## 2. 제언의견

- 마상진 박사, 김중기 교수의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함. 특히 마상진 박사의 ‘농업계 학교, 귀농교육을 통한 단계적 농업인력육성 체계도’와 김중기 교수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의견은 중장기적으로 대상별, 단계별 미래농업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청사진이라고 보임.

### 1) 제도 및 조직, 인력 등 인프라 측면

- 2030 후계농업인창업지원센터(가칭) 설립 및 운영
  - 농업법인 추천 및 고용 지원, 컨설팅, 창업정책자금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안내 및 상담 역할 수행
  - 개인별 맞춤형 취업·창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청년 취업·창업자의 환경과 단계 등을 분석·진단하여 지원정책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농업 취업·창업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전문컨설팅
  -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는 있되 사업담당자는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실효성있는 상담안내가 될 수 있음.
- 미래인력양성 관련 종합안내 사이트를 귀농귀촌센터 사이트를 활용하여 운영·안내
- 전북농산업인력개발원에 ‘청년농업창업학교(가칭)’ 과정 개설 및 운영
  - 체계적·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인력 양성을 위해 1~2년 장기과정 개설 운영
  - 농업·농촌의 가치의 이해 등 기본 마인드부터 기초기술, 지역 정착 등 종합 교육
  - 승계농 및 비승계농, 농업 경험자 및 무경험자 등 대상에 따라 교육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 차별화 설계 운영
  - DB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미래리더로 양성
- 도 농업인력양성위원회 - 시군 농업인력양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 필수)
  - 지역내 인력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심의·의결·점검기능 수행
  -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전심의, 의결 기능

- 지역내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주체별 협력방안 협의 기능
- 중장기 농업인력육성계획 수립 및 집행, 추진점검 등 기능 부여
- 도 양성위원회 산하 실무사무국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 (DB 관리, 사업이행 점검, 성과관리, 환류 기능 등 수행)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우수 농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청 협조를 통한 의무화
  - 직업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중학교 과정에 우수학생이 농고 등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적극 활용
  - 중학생 눈높이의 우수 농산업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체험운영비를 지원하여 중학생들의 참여 확대
- 전도내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의 DB화 및 지속 관리·활용
  - ‘미래농업인력 서포터즈(가칭) Pool’ 등을 구축하여 지속 활용
    - ① 현장교수로 활용가능한 품목별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현장실습 교육장 등 DB 지속 업데이트(멘토 및 후견인, 교육강사 등 활용)
    - ② 농고, 농대 교수, 전북농산업인력개발원, 지역농업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민간 인력양성 전문가
    - ③ 리더십, 창업, 6차산업 등 컨설턴트, 강사 등 관련 전문가
  - 농고 졸업생 DB화를 통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 제공 : 농대 진학 또는 농업법인 취업, 창업까지 이르도록 지속 관리 / 정기적으로 애로사항 등 의견조사·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종합지원 제공
- 농고교사 농산업 실습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농고교사 직무교육 개선
  - 현장실습교육장, 농업마이스터 등과 연계한 실습교육 프로그램 확보·운영
  - 참여 촉진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습관련 직무교육 참여 시 평가 가점제도 등 도입
  - 도내 농고 교사, 교장 대상 ‘농산업 창업·미래인력 전문가 워크숍’ 등 마인드 제고 및 농산업 미래성장 가능성, 미래인력 양성 담당자로서 자부심 등 공유할 수 있는 장 필요(교사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학생들 변화 어려움)

## 2) 현장 지원사업 측면

- 전북형 현장실습교육(WPL) 운영

- 농정원에서 귀농희망자, 농업인, 농고농대생 대상 현장실습교육 사업을 지원 중이나 현재 교육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희망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전북에서도 기 지정된 현장실습교육장을 활용, 자체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실습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농고·농대 졸업 후 창업지원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 정책 필요
  - 농고/농대 학교기업 지원 → 인큐베이팅(1~2년동안 생활비 및 운영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농업청년인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학습조직 등 형태 활용) → 경험 축적 후 본격 창업(창업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제도 활용)
- 승계가능 농가에 대한 조사 및 지원정책 강구
  - 승계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승계농 대상 기술 및 경영정보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모간 갈등관리 및 합리적 승계계획 교육 등 제공
  - 농고/농대 시 장학금 혜택, 농지 및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등 필요
- 도시 일반대학생 등 대상 농산업 전망 및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대학 학생회,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전북 농산업 체험대장정, 농활(농번기 일자리 확보 연계) 등 대학생 눈높이의 참여프로그램을 지속 제공
  - 취업 정보, 귀농지원정책, 청년귀농사례(축제 후원 및 부스 설치 등 활용) 등을 지속 안내하여 관심 촉진
  - MT, 졸업여행 등을 유치하여 전북도에 대한 친밀감과 흥미 증진도 필요
  - ‘귀촌’에서 ‘귀농’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청년인력의 진입이 농촌 어메니티를 통한 귀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 중간지원조직, 마을사무장 취업 등 농촌 일자리에 대한 안내 필요
- 해외 청년창업지원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미래농업인력 양성 적용방안 모색 (농업분야 외에도 다양한 타산업분야 사례 조사·분석)
  - 이스라엘 청년창업지원제도 : 창업 실패에 대한 구제책, 창업경험 축적 등 청년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제도 벤치마킹
  - 미국 아소카재단 지원사업 : 우수 창업아이디어와 전문인력을 심층심사하여 파격적으로 집중 육성, 롤모델을 창출하는 사업

※ 마상진 박사, 김중기 교수께서 다양하게 제시한 미래인력 확보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함. 아이디어가 정리되지 못하고 산만한 감이 있어 죄송함.

미래농업인력 확보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고 갈 책임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1~2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장기과제란 것을 인식하여,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꾸준히 씩씩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번 전북도의 노력이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길 바람. 워크숍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아쉽고, 이후 지속적으로 농정원은 전북과 연계하여 좋은 인력양성 사례를 만드는데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문

김 정 용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지난 워크샵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논의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나 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두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이제 구호로서나 존재할 뿐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대대로 살농정책에 다름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농정책으로 대다수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노동자로 전락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피해해졌고 결국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농사를 짓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을 바꿔내지 못하면 결국 농민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농업은 기업이 진출해서 명맥을 이어가겠지만 농민은 농업근로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을 제대로 바꿔내고 이것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채우는 방식이 유효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없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미래농업인력 육성이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농민은 국민식탁을 책임지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농사짓는다면 하찮은 존재쯤으로 바라봅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들 세대들은 내 자식은 농사만은 짓지 않게 하겠다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농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농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합니다. 농민이 존경받는 세상, 농사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농사짓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관을 존경하고 영웅으로 대접하고 어린이들 꿈이 소방관입니다. 이런 정도의 존경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분위기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꿈을 농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미래농업인력육성은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 토론문

서 병 준 /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현장토론으로 대체)

지정 토론문 5

## 토론문

신 용광 /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통과 교수

(현장토론으로 대체)

## 토론문

오 미 란 /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  
젠더와 공동체 대표

- 미래농업 인력의 정의 : 청년층 인재로 보는 것은 단순히 연령이 젊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이런 의미에서 신규취농으로 범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즉 40-50대 역시 인력육성에서 중요한 인력임. 실질적으로 귀촌 귀농 인구 중에서도 청년인구 보다는 40-50대의 인구의 육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으로 청년층 부족, 구체적인 목표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부재,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거버넌스 부재, 농업계 학교에 대한 지자체 차원 활용 및 농산업계간 연계 활동 부족을 지적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인력에 관한 시스템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 중에 정착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영역이 지속적인 사업 부재 속에 포함되기 보다는 하나의 영역으로 범주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농업인력의 주요부분으로 설정된 귀농 귀촌 인력과 관련한 지원 시스템에서 귀농교육과정과 정착지원 과정의 영역은 중요한 영역임.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된 문제는 지원이 없는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이 없지도 않음. 오히려 수많은 지원이 귀농귀촌에 집중되어 있음(농업인 대학, 강소농 육성, 기타 생활자원 교육 등). 그러나 문제는 교육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큼. 따라서 인력육성을 교육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극복하여 교육과 실행(취농이든 창업농이든) 구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미래농업 인력의 핵심은 가족농 중심에 두고 있다면 핵심은 농업인력으로서 농촌사회에 성공적인 정착과정을 지원하는 과정이 중요함. 그러나 여전히 인력육성에서 영농중심의 교육이나 기반확충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이 과정에 성별의 욕구를 반영하여 농업외 여건(교육이나 문화의 기반강화)등의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즉 직접적인 영농인력육성과 더불어 영농지속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의 단계를 잠재단계-〉 예비단계-〉 실질적인 정착-〉 은퇴농 으로 구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단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임. 그러나 실질적인 정착단계에 인력육성이 정착이 집중되어 있음. 예비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예들 들면 농업인력 유형구분에 따른 지원전략이 필요함 : 미혼/기혼, 남성/여성, 고향/타향, 직접영농/농산업 영역간접 영역, 취농/창업농, 연령별(30대 이전/ 4-50대)구분

## 토론문

조 경 호 /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마상진 박사님은 도 차원에서 농업인력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과 이를 통한 단계별, 경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김중기 박사님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부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과제들입니다. 이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창업농, 승계농 등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안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특성상 취농 초기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까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U의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일본의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등과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업인 기본소득제’ 등의 정책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우선 나서야 하는 사업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2016년부터 2년간 실시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 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나 보다 전면적인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귀농귀촌의 현황을 보면 순수한 귀농보다는 귀촌이나 겸업 형태의 귀농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소득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농업인력’ 차원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정책과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적 접근’ (6차산업과 같은)도 보완정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농업인력 유입 및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도에서의 거버넌스도 필요하지만 시·군 차원의 거버넌스가 더욱 유용합니다. 도에서는 큰 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다양한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버넌스 구성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요구됩니다. 현재 일부이기는 하지만 귀농귀촌과 관련한 ‘부적응’, 또는 ‘역차별’ 등의 우려 섞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지역주민, 농업인 조직 등)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회의소’의 설립과 참여 등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다른 직업에 비하여 이점(merit)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악한 소득과 힘든 노동, 생활의 불편, 교육/복지 등의 소외 등입니다. 바로 삶의 질, 또는 삶의 방식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공간이 ‘살 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농촌성(rurality)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살기에 매력적인 곳’으로서의 ‘농촌’을 위한 여러 사회/문화/교육/복지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경제적 정책들은 반드시 도시와 경쟁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유입’을 위한 정책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위주의 귀농귀촌사업이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과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워크숍에서 저는 현재의 농업인력 부족 문제는 규모화를 전제로 한 엘리트농정의 결과이며, 대책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승계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영농기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반면에 많은 신규농(귀농인, 창업농)들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매우 고전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그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합니다. 규모화·특화정책으로 인한 인력구조 분야의 결과는 ‘농업계층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새로운 인력을 유입, 육성하는 정책은 이를 시정·보완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중소농·가족농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주력생산을 담당할 핵심인력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품목과 기능을 담당할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비전과 작부, 품목, 가공, 유통, 소비 및 지원체계 등을 아우르는 지역별 전략이 전제되지 않는 개별 정책은 자칫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과거의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